

# 第156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7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91年10月11日(金) 午前10時

## 議事日程(第7次本會議)

1. 統一·外交·安保에 관한 質問

## 附議된 案件

1. 統一·外交·安保에 관한 質問 ..... 1面

(10時2分 開議)

○副議長 金在光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第7次 本會議을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姜天求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 統一·外交·安保에 관한 質問

(10時4分)

○副議長 金在光 議事日程 第1項 統一·外交·安保에 관한 質問을 上程하겠습니다.

오늘 質問하실 議員은 다섯 분이십니다. 會議進行은 다섯 分의 質問이 모두 끝난 다음 停會를 했다가 午後 會議에서 政府側 答辯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民主黨所屬 서울 中浪乙區 金德圭議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圭議員 서울 中浪乙區出身 民主黨所屬 金德圭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하신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核武器의 검은 구름이 韓半島에서 걸터가고 南·北韓이 UN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 冷戰時代에는 달혀진 禁忌의 단어였던 軍縮이 열려진 광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地球村은 脫理念의 거대한 지각변동 속에서 經濟的 適者生存의 무한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인 전환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未來學者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權力移動에서 “社會主義가 미래와 충돌했다”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秘密主義와 統制 그리고 中央集權과 같은 官僚主義의 낡은 도구로는 변화하는 시대와 변화하는 民衆의 요구를 수용해 낼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래와 충돌하지 않고 미래를 창조해 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역으로 民主와 自律 그리고 創造的인 役割分擔이 力動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한 國家와 民族이 얼마나 잘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그리고 合理的으로 運用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政府의 統一·外交·安保에 관한 政策이 과연 民主와 自律 그리고 創造的인 役割分擔에 과연 충실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대세에 따라서 그 어느 政權보다도 유리한 여건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政策이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논의되고 國民的 合意없이 推進되었으며 極少數의 權力層에 의해 執行되었음을 생각할 때 本議員은 現 政權이 民族國家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能力도 責任感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外交는 內治의 延長이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共政權은 外交的 成果로 內治의 失敗를 호도하고자 했습니다.

過消費外交로 특징지어 마땅한 對蘇經濟協力을 本議員은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蘇聯에 쿠데타가 일어나자 中國의 言論媒體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나라는 바로 韓國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1年 나라 豫算의 10分の 1에 해당하는 援助를 蘇聯땅에 쏟아붓고 있는 중에 蘇聯聯邦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 30億弗의 낭비를 비아냥거리는 外國의 言論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美國 英國 日本은 蘇聯 聯邦內 各 共和國의 獨立을 예상하고 聯邦政府의 援助供與要請에 변죽만 울려대며 미루고 있습니다만 韓國政府만 그 시험대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속 빈 강정식의 北方外交를 펼쳤습니다.

蘇聯의 아시아 太平洋 진출노력에 대해 美國과 日本은 蘇聯의 개혁과 개방을 지지하면서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無料入場을 명백히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情勢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슬기롭고 인내심있게 대응했다라면 다소 시간은 걸렸을지라도 主權國家의 체모를 당당히 세우면서 또 최소한 經協資金의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修交할 수 있었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總理의 見解는 어떻습니까?

사실 蘇聯도 우리와의 修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貿易赤字가 100億弗에 이르는 나라가 30億弗이라는 거액을 제공하면서까지 그것도 儀典上 굴욕에 가까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修交를 추진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本議員은 단순히 情報不足이나 판단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6共 外交政策의 必然的 歸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 任期안에 修交를 成事시켜 內治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던가 그렇지 않다면 당시만 해도 포기하지 않고 있던 내각제 개헌에 대한 國民의

동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政治的 政權的 次元的 利益에 집착했던 결과인가 그 또 아니라면 당대 業績主義의 產物인가 總理는 이 셋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本議員은 정략적인 고려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國家利益과 의견 그리고 國內經濟事情 등이 지극히 소홀히 취급되었던 外交史의 실증적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國民이 저야 할 과중한 負擔을 생각할 때 總理와 外務長官께서 國民 앞에 마땅히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總理와 外務長官께서 謝過意思가 없다면 당시의 措置들이 왜 어떠한 점에서 過消費外交가 아니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億弗 과소비외교에 대한 진지하고 검허한 반성 위에서 우리는 정략과 과당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정객이 아니라 國益과 國民을 먼저 생각하는 政治家가 外交와 安保와 統一政策을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바로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政府는 변화하는 時代의 요구에 발맞추어 과감한 發想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外交·安保·統一分野에서 냉전적 사고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먼저 國家保安法을 비롯한 냉전의 잔재가 폐기되어야 하며 모두가 새 시대에 동참한다는 대응적 차원에서 國家保安法에 관련된 구속인사의 석방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政府는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온적입니까?

總理께서 이 問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냉전적 사고에 깊숙히 젖어 있는 정부인사들을 一線에서 퇴진시키는 大幅的인 人事刷新입니다. 總理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積極的 자세로 새로운 時代를 개척할 專門性과 實踐意志를 갖춘 政策 엘리트들에게 과감하게 權限과 責任을 그리고 역할을 이양해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이제 UN에 동시가입함으로써 韓國外交史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外務部長官! 한마디로 소모적인 南北 對決外交에서 生産的인 經濟國益外交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이제는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國家의 興망성쇠가 資本力과 尖端産業의 技術力에 좌우되는 高度로 情報化된 社會 21世紀를 눈앞에 둔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의 外交官들은 세련된 정보마인드로 무장된 經濟外交의 騎士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불매 우리 外交는 아직도 방향과 戰略을 세우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北方外交는 차분하고 냉철한 姿勢로 國益을 추구하기 보다는 政略에 치우쳐 國益을 소홀히 하는 亂脈相을 보여 왔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思考의 틀과 문제를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이에 맞추어서 戰略自體가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本議員은 이제부터 各 地域別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國家外交 經濟國益에 맞는 外交의 基本戰略은 무엇인가 政府의 答辯을 구하고자 합니다.

蘇聯問題는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對蘇經濟協力 30億弗이 蘇聯 國內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하는 문제와 함께 蘇聯 聯邦體制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해 주시고 우리의 對蘇 進出의 基調와 方向에 대해서도 外務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中國과의 外交問題입니다.

外務長官께서는 中國大陸의 政治·經濟의 변화의 전망과 中國에 대한 政策의 基本戰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年 香港이 中國에 반환된 후에 香港의 運營體系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 또한 中國과 臺灣의 統一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은 이 자리에서 中國問題야말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統一을 위해서는 中國政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中國과 우리와는 經濟的으로는 補

完關係라기보다는 競爭關係에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中國經濟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반면에 우리 經濟는 더이상 발전을 못할 경우에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 外務長官! 이런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協力の 규모와 방법 그 시기에 대하여 政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北韓 金日成主席이 中國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의 中國과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統一問題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政府가 파악하고 있는 訪問結果와 함께 특히 中國과 北韓關係, 韓·中修交의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日程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先進諸國은 다른 國家의 급속한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서 技術保護主義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物質特許의 制度化와 소프트웨어 保護立法 壓力, 特許法의 國際的 統一 움직임 등은 自動車, 家電製品 등의 對先進國 輸出에 커다란 장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政府가 정확한 方向感覺과 적극적인 實踐意志를 가지고 대처하지 못할 때 과연 韓國經濟가 어떠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지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經濟外交를 위해서 커다란 發想의 전환과 國家的 차원에서의 戰略樹立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技術保護主義에 대처할 우리 政府의 基本立場과 對應方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는 OECD에 加入하는 것 자체를 先進國 진입으로 생각하고 이의 加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라는 綜合的으로 따져볼 때 득보다 失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外務長官께서는 具體的으로 그 득과 失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EC地域의 統合問題에 관해서는 樂觀論과 함께 蘇聯, 東歐의 붕괴로 實質統合이 어려

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政府는 EC統合의 속도와 展開方向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對EC外交의 基本戰略이 무엇인지 具體的으로 公開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地球村의 政治·經濟的 地形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民族의 생존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과연 ipsis 아메리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對美自主外交의 基本戰略 또한 어떻게 수립할 것입니까? 外務部長官의 견해와 정확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未來學의 世界的 권위였던 故 허만 칸博士는 향후 일본의 役割變化가 1870年代 프로이센의 役割變化에 비유될 만큼 世界秩序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막강한 日本의 經濟力은 머지 않아 “經濟大國 日本”을 넘어서 “軍事大國 日本”을 顯在化시킬 것이라는 것이 一般的인 관측인데 總理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70年代 중반 이후 日本의 軍事戰略概念이 專守防禦에서 地域防禦 나아가서 世界戰略 차원으로 전환되었고 지난 4月26日 전후 길프戰에 掃海艇團을 파견한 것이 戰略變更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행동이라고 本議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地域에서 日本이 軍事的 책임을 더 맡는 일이 長期的인 관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總理 및 關係長官께서는 향후 日本의 軍事大國化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특히 日本이 統一支援勢力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統一妨害勢力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政府의 基本立場과 對策은 어떠한지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北韓과 日本의 修交交渉過程에서 北韓은 植民統治期間뿐만이 아니라 戰後 45년에 대해서도 賠償 또는 補償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政府의 시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太平洋戰爭에 강제로 동원돼 희생된 者에 대한 戰後清算問題에 관해서도 최근 日本과 논의된 事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은 北韓에 진출하여 그 市場을 확보하는 동시에 질 좋고 값싼 勞動力으로 電子製品 등을 생산해서 여타지역으로 輸出하겠다고 하는 戰略을 가지고 있습니다.

北韓의 힘을 이용해서 南韓의 國際的 產業競爭力을 弱화시키겠다고 하는 발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반면 北韓은 南韓과의 交流로 인한 北韓住民의 동요보다는 日本과의 協力關係를 추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日本의 國益路線은 우리의 國益路線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北韓뿐만이 아니라 蘇聯과 中國 그리고 아세안諸國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總理와 長官께서는 蘇聯과 中國, 아세안諸國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國益과 日本의 國益이 어떻게 충돌할 것이며 이에 대한 對策은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豆滿江 河口開發計劃에 대해서 우리 政府가 구상하고 있는 참여도와 함께 일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政府側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外務部長官에게 한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오늘날 海外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同胞의 수는 500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오지 못한 이유는 차치해 놓더라도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우리 民族을 찾아보는 뜻에서 뿐만 아니라 國力伸張과 民族의 단결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國際的 지위향상에 많은 역할을 해온 海外僑民들의 權利를 보호하고 教育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外務部傘下에 僑民廳을 新設할 것을 제안하는 우리 黨의 주장에 대해서 外務部長官께서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9年 부시美大統領은 CIA안에 외국의 産業情報를 수집하기 위한 特別情報팀의 설치를 지시했으며 로버트 게이츠 신임 CIA局長은 최근에 최대의 적이었던 蘇聯共產黨이 해체된 時點에서 尖端産業을 중심으로 經濟諜報戰에 적극 뛰어들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마디로 -國家情報機關이 향후에는 國益의 守護를 위해서 具體적으로는 自國의 經濟的 利益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本議員은 우리 政府의 情報管理體系가 보다 組織化되고 體系化되어야 할 것이라는 點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國務總理! 현재 外務部 商工部 農林水産部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외정보수집업무를 日本의 內閣調査室과 같은 형태로 재조직해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總理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安企部는 反共思想戰보다는 尖端産業情報戰이 중요해진 脫冷戰時代에 맞는 對外情報處로서 政治査察과 對民搜查를 담당해온 불필요한 부서들을 개편함과 동시에 經濟情報局과 科學技術局을 신설해서 국가의 戰略的 頭腦組織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명실상부한 國家利益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總理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安保分野에 대해 質問하겠습니다.

그동안 政府는 南韓의 核武器 存在 與否에 대한 內外的 疑懼心에 대해서 是認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답답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國防部長官은 부시大統領의 발표가 난 당일까지도 이 國會答辯을 통해서 韓國內 核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않는다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발언으로 일관해서 國會와 國民을 우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부시 大統領의 발표를 보면 野黨議員들이 南韓內 美軍 保有核의 실태와 운영현황을 질문했을 때마다 國家安保를 빌미로 核武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政府가 명백한 僞證을 했음이 결과적으로 분명해 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總理와 國防部長官은 國民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50餘基에 이르는 短距離 核武器의 관리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우리 政府가 갖고 있지 않았다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 이 政府는 한 마디로 國民의 生存과 自存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얘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國防長官! 솔직히 말해 봅시다.

政府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核問題와 관련해서 總理에게도 묻겠습니다.

오는 10月20日로 예정된 4次南北高位級會談에서 政府가 구상하고 있는 核關聯 對北提議는 무엇입니까? 南韓에서의 核武器 撤收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리고 美國의 핵우산이 우리 安保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防衛費와 軍縮問題에 대해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防衛費 削減論議는 全經聯附設 韓國經濟研究院과 같은 민간 연구소뿐만 아니라 政府機關인 KDI에서조차 쟁점화한 지 오래입니다.

물론 國防費問題는 우리 民族의 생존 자체를 담보해 주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本人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脫軍事化 脫冷戰化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國防費問題가 결코 國家安保라는 성역속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더욱이 과다한 國防豫算으로 인해서 經濟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때문에 國民의 공개적인 비판과 참여속에서 國防費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몇가지 政府立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政府는 未來戰에 대비한 軍事力 建設의 3大事業으로 첫째 地上軍 55萬名 유지, 둘째 地上軍에 대한 處遇改善, 셋째 戰力增強事業의 지속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걸프戰의 경험으로 未來戰에서는 尖端技術에 의한 武器體系가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나.

따라서 本議員의 판단으로는 위의 세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선 地上軍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대신 동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地上軍減縮에서 얻어지는 財源을 戰力增強事業의 기초가 되는 기술개발에 투입하면 이중 삼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國防部長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北韓은 지난 30年동안 무려 240차례에 걸쳐서 軍縮을 제안해 온바 있고 최근에는 줄속적이기는 하지만 具體的인 3段階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도 具體的인 軍縮計劃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軍縮計劃은 戰力增強事業을 준비하는 바로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보는데 軍縮과 관련된 政府의 具體的 計劃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統一政策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共和國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北方政策과 統一政策은 심각한 이중성을 안고 있는데 統一院長官께서도 알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南·北韓 平和共存體制를 현실화시키는 일방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主義圈의 대변력을 바탕으로 南韓主導의 吸收統一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중 플레이는 北韓을 자극해서 대화를 중단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자로서 마주앉기를 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吸收統一方案을 배제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 政府의 統一에 관한 철학을 알 수 있는 가장 核心的인 사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總理께 물겠습니다.

統一을 추진하는 우리 政府의 기본철학은 무엇입니까? 獨逸式 吸收統一方案은 분명히 포기된 것입니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第4次高位級會談은 南北이 UN에 가입함으로써 서로의 國家的 實體를 國際的으로도 공인받은 이후 처음 대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統一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노력도 이제는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라고 보는데 서울과 平壤에 서로의 常駐代表部를 설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總理는 이번 會談에서 常駐代表部 설치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 第4次高位級會談에서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共政府는 지금까지 南北頂上會談의 성사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이를 對北韓政策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착실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수적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南北頂上會談의 성사를 위해서라도 南北關係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화채널을 확대해서 南北 政黨과 民間 社會團體 등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本議員은 對政府質問을 마치면서 政府當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國家의 안위와 民族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政策事案들이 國民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밀실의 회합에서 결정되던 舊習은 이제는 과감하게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政府가 官僚의 權威主義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낡은 패려다임과 잘못된 전략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수용하려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 열강의 각축을 국익의 차원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좌초해야만 했던 舊韓末 歷史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在光 다음은 民主自由黨의 忠南 唐津出身이신 金顯煜議員 나오셔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顯煜議員 먼 옛날 新羅時代 唐나라로 가는 우리나라의 外交와 通商의 關門이었던 그리고 앞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크고 긴 西海大橋가 세워질 忠清南道 唐津出身 民主自由黨所屬 金顯煜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先輩議員 여러분 그리고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本議員은 對政府質問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政府가 이루어 놓은 드높은 北方外交의 업적에 대해서 祝賀와 讚辭의 人事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43년간의 政治 外交의 숙원을 이루어 낸 外交의 현장인 UN總會에서 盧泰愚 大統領의 연설을 듣는 것은 실로 감격적이고 감회 어린 것이었음을 本議員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盧泰愚 大統領의 연설은 分斷의 苦痛과 戰爭의 공포속에서 살아온 우리 民族이 이 땅에도 平和와 和解와 統一의 날이 올 것이라는 自信과 確信을 갖게 한 감동적인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國民들에게 새로운 希望과 勇氣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本議員은 그동안 北方外交와 UN外交의 삭막한 현장에서 애국심과 충성심을 불태워온 外交의 主役들에게 慰勞와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北方外交의 一役을 맡아 주었던 수많은 體育人 藝術人 言論人 企業人 그리고 議員外交에 앞장섰던 國會의 輿野 先輩議員 여러분께도 祝賀의 人事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北方外交의 성과는 國民外交의 勝利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本議員은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계곡의 물결처럼 急變하고 있는 오늘날의 國際情勢는 蘇聯에서 共產黨이 해체되고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이 이루어지고 美·蘇의 戰術核廢棄宣言에 까지 이르므로써 世界는 바야흐로 平和의 時代 문턱에 다다른 것 같은 착각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고에서 內戰과 같은 局地的인 분쟁이 발발가능성이 世界到處에 뻗어 있다는 不安과 不確實性으로 가득차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의 國際政治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國際政治와 外交的인 전환기에 本議員이 이 자리에서 統一·外交·安保部門에 대한 對政府 質問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核問題에 關係해서 國務總理께 質問

하겠습니다.

本議員은 核問題가 가장 민감하고도 심각한 政治·軍事·外交的인 문제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國際政治의 현실은 核問題가 軍事戰略家나 外交政策을 결정하는 작은 숫자의 사람들의 專有物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요, 核에 관한 정보와 지식 또한 政府의 독점물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核問題에 관한 政策決定은 어떠한 다른 문제보다도 國民的인 합의와 超黨的인 공감대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本議員은 믿기 때문에 核問題에 관한 本議員의 質問에 대해서 政府側의 솔직하고도 前向的인 答辯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9月27日 부시 美國大統領은 地上配置 短距離 戰術核武器의 全面 廢棄를 비롯한 획기적인 核軍備 減縮措置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서 10月5日에는 고르바초프 蘇聯大統領이 이에 상응하는 대폭적인 核軍備 減縮措置를 선언함에 따라서 世界는 이제 지난 40年間的 核軍備 擴張競爭을 종식하고 核軍備 縮小競爭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世界的인 核軍備 縮小와 긴장완화를 향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韓半島에서는 北韓이 아직도 核武器 開發計劃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요 國際的인 核査察 受容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우리의 安保와 東北亞 아시아 전체의 安保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일각에서는 核武器를 철수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北韓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시함은 물론이요 核問題와 關係해서 국민 여론 또한 통일되지 못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實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 政府의 核政策에 대한 완전한 國民的인 합의

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民主黨의 李基澤 共同代表께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韓半島 非核化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韓과 美國間의 3者會談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核問題에 관해서 國民輿論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이요 바람직한 안보태세에 대한 國民의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核政策 全般에 관해서 國務總理께서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한 對國民說明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北韓이 내놓은 韓半島의 非核地帶化問題와 관련하여 국내일각에서는 世界의 평화조류를 반영하는 선상에서 韓半島에 非核地帶 設置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도 일부 있어 온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政府는 南北對話와 隣近 強大國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韓半島의 非核地帶化 問題는 논의될 수 없다는 政府의 기본입장을 일관되게 지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美·蘇가 새로이 발표한 획기적인 核政策은 韓半島 非核地帶論議에 새로운 양상과 방향을 갖게 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韓國에 더 이상 美軍의 核武器가 없다면 南·北韓이 非核地帶化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北韓의 核開發可能性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발상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美國으로 부터 核雨傘 保護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政府가 非核政策을 일방적으로 천명하면서 동시에 北韓으로 하여금 非核政策을 선언토록 종용하는 것은 어떠한지? 그렇게 함으로써 北韓의 核開發可能性을 제거하고 일부 국민들의 反核 反戰輿論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國務總理의 意見은 무엇인지 本議員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本議員이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韓半島는 궁극적으로는 單一國家로 통일될 것이기 때문에 非核地帶概念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國際的인 조약체결에 의한 非核地帶의 창설은 결과적으로는 周邊 強大國家들의 政治 軍事介入의 여지를 남겨 놓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유사시에는 NCND政策의 선택권을 저해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韓半島는 中南美地域의 22個國이 참여한 플라렐로코(Tlateloco)조약과 남태평양의 12個國家가 참여한 라로통가(Rarotonga)條約과 같이 國家間의 협약에 대해서 非核地帶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政府의 의견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또한 本議員이 계속 質問하고자 하는 것은 부시 大統領이 발표한 核軍縮案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地上發射 戰術核武器가 폐기된다고 할 때를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駐韓美軍이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랜스미사일의 核彈頭와 각종 砲의 核爆彈도 물론 폐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美國이 核雨傘政策을 지속하게 될 경우 그 核雨傘政策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政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美國의 核撤收로 인해서 韓國의 전반적인 戰爭 抑止力에는 어떠한 이상이나 문제가 없을 것인지? 또한 이러한 상황하에서 NCND政策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 실현성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本議員은 國防部長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先輩議員 여러분! 최근 政府는 韓半島에 있어서 核問題에 관한 協商權이 우리 政府에게 있다고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核問題와 관련해서 그동안 韓國과 美國間에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협의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한 핵협

상에 관한 권한이 우리 政府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核武器撤收는 이미 既定事實화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政府의 견해도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核武器撤收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東北亞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인 北韓의 核武器開發을 중지시키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美國의 核武器撤收가 北韓의 核武器開發을 중지시킬 수 있겠는지 本議員은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北韓이 非核地帶化를 제의하고 있습니다마는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美國의 核撤收가 金日成政權의 核開發을 단념시키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北韓이 겪고 있는 극한적인 經濟的 어려움과 파탄에도 불구하고 平壤근처의 寧邊에 고가의 核施設工事を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은 北韓의 核武器開發이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를 촉진시키거나 對美·對日關係改善을 위해서 내놓은 外交的 압력과 협상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말할 수 없이 절박한 政治的 목표의 추구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北韓은 그 體制의 붕괴와 몰락은 물론이요 吸收統一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政治心理的인 안전판으로서 核武器開發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美國의 核武器撤收가 北韓의 核開發을 중지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인데 과연 北韓의 核武器開發을 막을 수 있는 對應方案을 政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外務部長官에게 答辯을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先輩議員 여러분! 北韓이 核武器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韓半島에서 뿐만 아니라 東北亞의 安保와 安全에 큰 위해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데 모든 外交的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政府는 美國 日本 友邦國과의 협조와 IAEA 등 國際機構를 활용하여 對外壓力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外交力을 발휘한 것으

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北韓의 核武器開發促進要因을 약화시키는데 있어서도 外交的인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具體的인 對策은 서 있는지 外務部長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先輩議員 여러분! 부시大統領이 空軍戰術核武器를 撤收對象에서 제외시킨 것은 美國의 友邦國에 대한 核雨傘 保護政策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고 나아가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美國의 軍事的 對應方案을 가능한대로 다양하게 유지하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美國의 입장은 韓半島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 美·蘇間의 核武器協商에서 空軍戰術核武器 處理問題에 우리는 특별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空軍戰術核武器가 美·蘇의 核武器減縮對象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한 國防部長官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地上戰術核武器 廢棄와 海上戰術核武器 撤收가 실시된다면 北韓이 核施設 國際査察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北韓의 核開發拋棄를 위한 國際的 壓力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이 만일 韓國內 核武器不在를 확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주장을 계속할 경우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本議員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政府의 對應方案은 무엇인지?

그리고 北韓이 核擴散防止條約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 北韓에 대하여 더 이상 核査察을 요구할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도 北韓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적극적인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本議員은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外務部長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議員 여러분!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美國과 蘇聯의 核政策의 근본적인 변화는 駐韓美軍의 駐屯問題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 冷戰時代 美國의 對蘇戰略은 대량보복을 전제로 한 동시다발 전쟁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美國은 이제 蘇聯으로부터의 戰爭挑發可能性을 제로로 평가하고 있으며 蘇聯과 中·短距離 미사일 폐기에 合意하고 美國의 근본적 방어를 美國 본토내에 배치되어 있는 戰略武器에 依存하려는 核政策을 樹立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美國은 駐韓美軍의 군사전략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評價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駐韓美軍의 철수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政府의 견해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國防部長官에게 質問하는 것입니다.

本議員은 다음으로 統一-外交問題에 관해서 質問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議員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分斷된 우리 民族의 統合과 統一은 우리들의 의사나 희망과 관계없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의 명령이요 하느님의 안배요 섭리라고 本議員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統一-外交의 목표는 UN 同時加入이나 단순한 영토의 統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統一-外交의 이상과 궁극적인 목표는 北韓의 同胞들이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고 자유롭게 헤어진 가족들과 만날 수 있으며 자기들의 代表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社會 다시 말하면 自由와 民主와 平和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존엄이 支配하는 社會를 건설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내는 것은 7千萬 同胞의 權利이며 동시에 義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獨逸이 統一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統一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統一 이후의 社會·經濟·政治의 副

作用을 우려한 나머지 統一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시각도 있고 여론도 일고 있는 것을 本議員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北韓이 經濟難을 극복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때까지 인위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政府의 統一意志 統一-費用의 調達方法 그리고 北韓內部的 실상과 변화의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政府의 분명하고도 솔직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주시기를 本議員은 바라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議員 여러분! 南北韓의 UN 同時加入은 누가 무어라 한다하더라도 北方外交의 성과요 世界史的 事件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南北의 UN 同時加入으로 말미암아 韓半島는 平和共存의 時代를 맞이하였다고 서둘러서 정세를 판단한다면 이것 또한 상황인식의 착오일 것입니다.

北韓의 UN加入은 그들의 統一政策의 기초에서 볼때 매우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國際關係의 새로운 조류에 적응하면서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UN이라는 무대를 平和攻勢의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政策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本議員은 이달 下旬에 平壤에서 열리는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北韓側은 南北不可侵宣言의 채택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과 명분이 더 강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政府도 南北韓의 UN加入實現과 國際的 平和共存의 구도가 짜여져 가는 자금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國際的 保障이 가능하고 확실한 南北不可侵宣言을 採擇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의지는 없는지 國務總理께 質問하는 것입니다.

또한 國務總理께서는 第4次 高位級會談이 비상한 관심속에 열리게 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南北不可侵問題와 軍縮協商에 대한 政府의 기본 입장을 이 民意의 殿堂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韓·日關係에 관해서 外務部長官에게 質問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先輩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아시아·太平洋時代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韓·日 兩國間の 진정하고도 건강한 우호와 協力關係의 증진은 兩國間은 물론이요 아시아와 世界の 平和와 번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頂上外交나 議員外交를 통한 우리 政府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兩國間에는 아직도 풀고 넘어가야 할 적고 큰 外交·政治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本議員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本議員이 참고삼아서 한가지 작은 실례를 든다면 지난번 南·北韓 UN加入에 즈음해서 日本政界에서는 韓國과의 外交的 事前協議 하나없이 서둘러서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本議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韓半島問題와 관련이 있는 日本政府의 다른 모든 部處를 따돌리고 日本 外務省만이 비밀스럽게 그것도 단독으로 서둘러서 北韓의 國家承認問題를 實務的 차원에서 檢討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또 本議員이 알기로는 그 비밀스러운 작업도 平壤을 드나드는 한 노정차인의 개입과 외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北韓政權의 경제적 파탄과 붕괴를 막아주기 위해서 서둘러 도와주려는 노력은 같은 동포로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日本政治人の 마음속에는 만의 하나라도 韓半島分斷의 固着化라는 정치적 의도와 고려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 本議員은 그 의미를 깊이 그리고 씩씩하게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日本 外交의 懸案은 북방영토의 반환과 對北韓關係 正常化라는 두가지 과제라고 판단되며 당분간 이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日本政府는 총력을 기울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本議員의 판단으로는 日本은 韓國 北方外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외교적 경쟁의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韓半島는 日本의 영향권하에 두어야 한

다는 인식을 수면하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에는 항상 민감한 政治·外交的 問題에 관해서 日本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日·北韓 關係의 경우도 관계정상화까지는 앞으로 2~3年 걸린다고 하지만 1年 以內에 타결될 것으로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日本의 미묘하고도 민감한 對韓半島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政府의 기본적인 인식은 무엇이며 中·長期的인 對應策은 세워져 있는지 外務部長官은 성의있게 答辯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日本의 軍事大國化와 P.K.O 문제 에 관해서 質問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先輩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오늘 이 자리에서 91年9月13日 日本 執權黨인 自民黨이 발표한 報告書의 요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國際社會에서의 日本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보고서는 日本은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軍事大國化와 政治大國化를 이룩함으로써 世界の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고 특히 아시아의 통합에 지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라야마 前 外務次官은 국제사회에서 日本은 中小國 外交로부터 유럽·美國과 함께 새질서 창조에 참가하는 大國外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日本의 정치·군사대국지향 의사를 시사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게시다 前日本首相도 방위력없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없고 동맹관계 유지에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日本 防衛大學校에서 훈시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日本 國會에서 審議中인 5장 27조 부칙으로 된 P.K.O 法案 다시말해서 UN平和維持活動支援法案은 大國化를 노리는 日本의 의도와 실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本議員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걸프戰爭 以後 日本의 軍事大國化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政黨間的 합의는 전후 그 어느 때보다도 일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분위기 또한

최대한으로 고조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本議員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長, 先輩議員 여러분 그리고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그렇다면 日本國會가 흥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P.K.O의 실체와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本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政府는 이와같이 감추어진 日本政治와 外交의 실체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지 外務部長官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K.O 法案에 대한 政府의 우려를 나타내는 단발성 논쟁으로 이 문제는 이제 일단락 되었다고 政府는 생각하고 있는지?

歷史는 자고로 經濟大國이 政治大國과 軍事大國이 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本議員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日本의 新國家主義의인, 성향의 國民性과 국제무역만이 생존을 가능케 하는 日本의 전략적 취약점을 고려에 넣고 생각할 때 日本은 근본적으로 政治大國化는 물론이요 軍事大國化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本議員이 이 자리에서 참고로 UN 平和維持活動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世界戰爭의 主役이 되지 않은 나라 둘째로 힘이 없는 약한 나라 셋째로 中立的인 外交를 수행하는 中立國家 이러한 세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國際社會의 상식이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日本은 이 세가지 조건중 어느 것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本議員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政府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P.K.O 法案에 대한 政府의 대응은 外交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했다고 보는지 앞으로의 對策은 무엇인지 外務部長官께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金日成의 中國訪問에 관해서 外務

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의 격동하는 국제정세속에서 金日成의 中國訪問은 우리나라에 크나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兩國 會談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되고 합의되는나 하는 것은 南·北韓 問題만이 아니고 東北亞 情勢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政府는 과연 이번 金日成의 中國訪問이 韓·中修交와 韓半島 情勢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지? 또한 北韓의 핵사찰 문제에 대한 中國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中國이 파탄 일보 직전에 있는 北韓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해서 어떠한 원조를 제공키로 약속하였는지 政府가 파악하고 분석한 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UR農產物 協商에 대해서 700萬 農漁民을 대신해서 外務部長官에게 특별히 質問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UR協商은 10月末이나 11月初에 協商草案을 마련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政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外務部로서도 다각적인 外交經路를 통해서 어려운 교섭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동향은 지극히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最近 GATT의 단켈事務總長은 例外없는 關稅化의 방향으로 協商案의 草案作成을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어서 700萬 農漁民의 우려를 더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쌀을 포함한 기초식량의 關稅化 例外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의 協商草案은 협상그룹별로 나누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기보다는 전체 협상의 수용여부를 묻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입장 결정에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外務部長官께서는 첫째 이와같은 최근의 報道와 情報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울러 協商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政府 특히 UR農産物 協商努力에 대해서는 많은 農民들이 깊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째 대해서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政府의 기본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本國政府는 물론이고 제네바代表部の 大使를 비롯한 모든 協商責任者가 확고한 所信과 責任感을 가지고 700萬 農民의 生存權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700萬 農民들은 지난 4月 제네바大使의 發言때문에 과연 外務部가 우리 農民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바와 같이 政府의 기본 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지 協商責任者로서 駐제네바大使가 얼마나 정열적으로 일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現地 大使로부터 報告받은 사항과 또한 長官께서 現地 大使에게 訓令을 내린 내용과 그 경과를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政府로서도 쌀市場開放을 할 수 없다는 기본방침으로 누누이 밝혀 오고 있지만 外務部長官으로서는 과연 앞으로 어떠한 결의와 방법으로 政府의 움직일 수 없는 기본방침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들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先輩議員 여러분 그리고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우리나라 外交·安保·統一에 대한 質問을 매듭지으면서 끝으로 本議員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韓國外交의 理想과 現實의 조화속에서 韓國外交의 原則을 하루속히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UN을 무대로 한 多國間 外交活動에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을 위한 政府의 방향과 견해와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면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政府의 일관된 外交의 原則이 하루빨리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날의 南北對決 구도

에서 벗어나서 堂堂한 世界的 國家의 모습으로 UN에서는 世界的 平和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고 對內的으로는 國家의 융성과 번영과 統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을 本議員은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質問을...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副議長 金在光 다음은 民主自由黨의 玉滿鎭議員 나오셔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玉滿鎭議員 民主自由黨의 玉滿鎭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本人은 지난 9月17日 우리 大韓民國이 滿場一致로 UN에 加入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6·25戰爭에 직접 參戰했던 老兵의 한 사람으로서 그 感懷가 깊었습니다.

지난 40餘年間 戰爭의 慘禍를 딛고 일어서서 수많은 苦難과 試鍊을 克服하고 이제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世界舞臺에 우뚝 섰다는 民族的 矜持와 自負心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成果는 4千萬 우리 國民의 繁榮된 自由民主國家를 건설하기 위한 피와 땀의 結實이며 43年間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UN加入이었음을 생각할 때 國家의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盧泰愚大統領의 6·29宣言이후 國民들의 同時多發的인 慾求噴出로 인한 民主主義 實現過程의 陣痛속에서도 各分野의 民主化 開放化施策을 지속적으로 推進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地方自治制의 단계적인 實施, 言論自由의 刮目할 만한 伸張, 더욱이 적극적인 北方政策推進은 蘇聯과의 國交樹立, 東西平和무드의 好機를 적극 調和시켜서 그 成果를 極大化함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오랜 念願이었던 UN加入의 歷史的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解決해야 할 수많은 課題가 남아 있습니다.

政治에 대한 國民들의 信賴回復을 비롯해서 貧富의 隔差, 地域間·階層間 葛藤의 解消, 高物價 輸出不振에 따르는 國際收支의 赤字擴大등 經濟事情의 惡化, 극소수 急進 젊은이들의 社會混亂 惹起등 적지 않은 問題가 놓여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現實입니다.

나.

이러한 수많은 難題들을 안고 統一에 대비해야 하는 歷史的 가장 중요한 時代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4千萬 國民이 단결하여서도 한번 第2의 經濟的인 跳躍을 성취하여 先進國의 대열에 進入할 絶好의 時點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議長,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昨今の 국제정세는 時時刻刻으로 急變하고 있으며 잠시의 現實安住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理想的 東西體制를 주도해 왔던 蘇聯共產黨의 沒落, 中國의 制限的인 開放化, 東歐의 開放化 물결 등 地球村의 내일에 대한 平和共存의 希望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프戰이나 유고事態 등 局地紛爭 可能性은 전혀 排除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日本은 막강한 그 經濟力을 바탕으로 軍事大國을 목표로 한 國際的 影響力을 擴大하기 위해서 軍備擴張 및 그 現代化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北韓은 經濟難으로 인한 住民들의 不滿이 高潮된 상태에서도 金日成唯一體制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手段으로써 아직도 南僞論理를 展開하면서 軍事力 增強을 계속하여 100萬이상의 現役軍中 그 70%이상의 兵力과 장거리미사일 등을 前進配置하고 核武器開發을 서두르고 있으며 國際核査察을 거부하는 등 東北亞 不安要因은 尙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앞으로 一定한 時點까지는 表面的으로는 平和共存體制가 지속될 것이나 內面的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軍事的 對決構造는 계속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와같은 認識을 바탕으로 國務總理에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첫째 安保側面에서 본 對北接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社會의 一角에서는 國際的 和解 및 平和무드에 젖어서 韓半島의 現實을 지나치게 希望의으로 認識, 統一至上主義에 빠져드는 傾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社會寡團氣의 擴散이 자칫 잘못하면 아직 아무 變化를 보이지 않고 있는

北韓의 赤化戰略 및 軍事威脅의 尙存事實을 忘却해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對北接觸面에서 政府의 豆滿江 經濟特區 參與, 金剛山 雪嶽山을 連結한 觀光地 開發등 北韓에 經濟的 影響을 미칠 수 있는 措置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重大한 문제는 北韓의 內部動向 國際社會 秩序를 考慮한 深度있는 研究 檢討가 필요하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과거 蘇聯의 시베리아開發 그리고 蘇聯 極東地域 開發을 試圖하려는 日本에 대해서 美國은 이를 反對하였으며 이는 當時 內部變化를 보이지 않고 있는 蘇聯에 대한 經濟支援은 마침내 敵에게 총알 補給을 促進할 수 있다는 論理였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北韓에 대한 經濟支援은 長期的으로는 緊張緩和를 위한 肯定的인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까마는 現在 南北의 170萬 大軍이 對峙하고 있다는 冷嚴한 現實과 北韓이 이제 UN會員國으로서 世界平和維持를 위한 그 責任을 다할 때까지는 總理를 中心으로 한 政府次元의 各部處가 事전에 緊密한 協調를 통해서 우리의 安保狀況과 연결하여 深度있게 研究 檢討해야 할 중요한 問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總理의 答辯을 바랍니다.

둘째 駐韓美軍의 役割變化에 따르는 對策입니다. 90年代에 접어들면서 世界는 平和共存무드에 힘입어 美·蘇間의 戰略武器 減縮 協商의 安結 등 軍備縮小問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美國은 지난 9月28日 世界 各國에 배치된 모든 短距離 核의 一方的 廢棄와 함께 核彈頭를 비롯한 大幅的인 撤收政策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東北亞 地域의 戰略的 變化에 엄청난 波紋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蘇聯의 이에 相應한 戰術核廢棄發表와 95년까지 쿠바를 비롯한 海外에서의 自國軍 完全撤收 發言 등을 볼 때 앞으로 美軍의 海外駐屯意味가 喪失될 것이고 특히 駐韓美軍의 撤收는 더욱더 具體化되고 早期 進行 可能性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美國은 92년까지 韓·美野戰軍司令部

의 解體, 단계적인 駐韓美軍 減縮을 위한 美議會의 公式의 論議, 向後 5年이내의 作戰統制權 韓國軍移讓 등 美軍減縮은 바로 우리 目前에서 現實的으로 進行되고 있습니다.

美軍의 減縮問題는 韓半島에서의 軍事力 弱화에 따른 南北間의 軍事力의 均衡維持面에서 問題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美國이 주도한 韓國防衛戰略은 韓國軍이 主導하게 되며 美軍은 단지 補助的 戰略으로서의 轉換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事態의 進展은 우리나라에 軍事·經濟的으로 엄청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 美軍만이 保有하고 있는 早期警報體制를 비롯한 最尖端 情報資産의 活用問題, 韓國軍의 戰爭指導能力 確保 등 지금까지 美軍에 크게 의존해 왔던 海軍 및 空軍戰力の 增強 및 地上核心戰力の 補強 등 우리나라에 미치는 國防經費의 負擔은 더욱더 加重될 것입니다.

政府가 向後 美軍役割變化에 따른 南北軍事力의 均衡維持를 위한 國防費의 增加必要性和 國民 一部の 國防費 削減主張 및 政府의 財政運用上의 國防費 確保制約 사이에서 어떻게 調和있게 對處해 나갈지 總理의 答辯을 바랍니다.

또한 安保問題는 그 나라의 國家安危와 직결되는 死活的 問題로서 強大國에 둘러싸인 우리의 地政學的 與件을 감안할 때 더욱더 절실한 問題입니다.

政府豫算의 25%以上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軍은 지금까지 對北一邊倒의 國家安保戰略에 초점을 두고 軍을 維持 發展시켜 왔으나 이제는 生存과 繁榮을 위한 巨視的이면서 廣範圍한 安保政策方向을 設定할 時機라고 생각되며 우리의 經濟力 擴大에 따른 海上交通路 保護, 周邊國에 대한 中間者的 役割遂行을 위한 力量確保 등을 고려한 새로운 戰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國防戰略에 따른 人力運用이나 武器體系는 10年 내지 15年の 長期計劃이 要求되는 特殊한 分野로서 앞으로 우리 安保에 대한 政策은 國防部만의 問題가 아니며 이는 世界情勢의 變化, 國內外 與件 그리고 특히 北韓의 變化에 대해서는 우리 統一院 外務部 國防部가 三位一體가

되어 迅速한 情報의 교환 그리고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分析을 통하여 가장 經濟的이면서 試行錯誤가 없는 國家의 最優先事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國防部長官의 見解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現在의 變化趨勢를 고려한 中·長期 國防政策 및 國防戰略에 대해서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韓半島의 核問題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國際的인 趨勢는 美國의 核廢棄政策 發表에 뒤이어 蘇聯도 이에 相應하는 措置를 함으로써 核의 減縮과 廢棄는 國際趨勢의 主流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國際的 變化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1·2年內에 核武器를 保有하게 된다고 하니 政府는 이에 대한 對應策을 段階的으로 闡明하여 北韓에게 警告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적극적인 外交活動을 통하여 國際法上의 義務인 核査察을 받도록 하고 이에 不應할 경우 政府의 궁극적인 對處方案은 무엇인지를 우리 國民과 北韓 그리고 國際社會에 闡明해야 할 것이며 北韓의 核保有는 韓半島의 政治 軍事狀況을 極限的인 것으로 陷入케 할 것이며 東北亞와 世界平和를 크게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北韓의 同盟國이었던 中國이나 蘇聯도 명백히 그들의 立場을 表明함으로써 立證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根源的이고 本質的인 問題는 北韓이 同族인 우리 南韓을 目標로 核武器開發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北韓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民族과 統一과 平和를 宣傳해 왔으며 우리는 北韓에게 그들이 貧困속에서도 방대한 資源을 투입해서 둘러 開發하고 있는 核武器는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使用할려는 것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政治圈에서부터 이 可恐할 核問題에 관한 그들의 意圖가 우리 南韓을 荒廢化시키고 4千萬 國民을 抹殺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目的을 貫徹시키려는데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總理! 이 문제에 관한 한 政府는 모든 政策에 우선하여 總力量을 發揮, 北韓의 核

武器 保有阻止에 內閣의 운명을 걸고라도 推進해야 한다고 보는데 所信은 어떠한지 國民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韓半島內 核武器 存在 與否의 확인이 不可能함에도 韓國內 核武器 撤收主張은 多方面에서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北韓의 核武器開發이 상당한 水準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던 一部在野勢力과 아직도 北韓에 同調하는 左傾勢力은 이 문제에 대하여 確實한 그들의 態度를 밝힐 것을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強力히 促求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國軍將兵들의 福祉에 대한 問題입니다.

軍은 그 構成員인 將兵들이 軍人으로서의 自負心과 名譽心을 喪失하면 그 機能發揮가 不可能한 特殊한 集團입니다.

특히 軍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下士官 問題는 軍의 戰力發揮에 절대적인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最近 2~3年 사이에 轉役을 希望하는 下士官들이 急增함으로써 실제 必要한 下士官 補率은 70 내지 80%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中士級이상의 절대적인 不足은 各軍 공히 戰力維持上 最優先的으로 해결해야 할 問題임은 금번 國政監査 期間中 各級 部隊에서 직접 確認된 事實입니다.

그 要因을 보면 報酬面에서 一般社會와 비교할 때에 同年同級의 50 내지 60% 水準에 不過하며 居住의 面에서는 7坪 내지 10坪되는 20年 以上된 老朽官舍生活을 해야 하며 그것도 不足해서 傳月黃生活을 하는 實情이고 특히 農村總角의 장가못간다는 社會問題가 지금은 軍의 下士官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軍의 核心要素인 下士官들의 士氣는 軍의 死活이 걸린 重要한 要素로서 戰力增強을 위해서 各軍은 名種 最尖端 武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裝備를 運用해야 할 下士官들이 不足하다는 事實은 戰力發揮에 직결되는 重要한 問題로서 人間의 가장 高貴한 生命을 有事時 기꺼이 祖國에 바치려는 그들이 國家로부터 그에 相應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一方의인 忠誠과 犧牲만을 계속 強要한 수 없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國防部도 2~3年前부터 이 問題解決을 위해서 多角度로 檢討중임을 알고 있으나 이는 軍戰力發揮을 위해 절대적으로 解決해야 할 重要한 問題로서 긴박한 事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國防部長官은 그 對策을 설명해 주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裝備數字를 다소 감소해서라도 核心的인 優秀한 長期下士官 確保를 위한 對策에 投資할 意向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北韓이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不可侵宣言에 대한 本議員의 意見을 提示하고자 합니다.

北韓은 南北會談時 奇襲的인 不可侵宣言을 提案함으로써 一部 國內의 활발한 質反意見 開陳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 속에 潛在된 北의 策略에 말려드는 愚를 犯하지 않을까 하는 憂慮를 남게 하였습니다.

우선 不可侵宣言이란 眞實性이나 信賴를 찾아 볼 수 없는 國際的 術策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歷史적으로 보더라도 1939年 獨·蘇 1941年 日·蘇 不可侵條約 등이 締結은 되었으나 이 條約은 宣言보다도 雙務的이고 責任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國內的으로는 1972年 7·4南北 共同聲明은 아직도 有效합니다만 共同聲明을 발표하는 그 시기에 北韓側은 南侵用 땅굴을 열심히 파게 하였고 그 이후 버마의 아웅산墓所爆破事件 KAL機 爆破事件등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經驗에서도 아무런 信賴와 實效도 찾을 수 없음을 배웠고 雙務的이고 責任이 뒤따라야 할 國際條約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聲明이나 宣言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특히 金日成에 관한 한 無意味하다는 것을 分明히 밝혀 둡니다.

그럼에도 北韓은 延亨默 總理의 10月4日 UN의 演說에서 또 다시 不可侵宣言을 強調하였습니다.

그러면 北韓은 왜 不可侵宣言을 執拗하게 要求하는가? 그들의 目的을 吟味해 봐야 하겠습니까.

첫째 政治적인 面을 볼 때에 그들은 美 占領軍의 追放, 植民地政治에서의 南朝鮮 解放, 南韓의 同調勢力을 적극 支援하여 革命 勢力을 확립하고 全民族 統一前線을 構築 統一을 達成한다는 金日成의 對南赤化戰略을 구축하기 위한 手段으로 추진하며 소위 主 體思想에 立脚한 自己方式의 社會主義建設이 라는 金日成의 對南赤化戰略 政策基調路線의 延長線上에 따른 一貫된 戰術이라고 評價된 니다.

따라서 北韓은 一部 意識화된 南韓內의 青年, 學生과 不滿階層民들에 의한 소위 南 朝鮮 革命鬭爭이 일어날 수 있는 條件들을 成熟시키는 것과 아울러서 聯邦制 統一方案 을 並行한 混合戰略으로 南韓 內部的 混亂 을 助長하자는 計算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軍事的인 측면은 不可侵宣言을 對美 平和協定으로 연결시켜서 駐韓美軍 撤收壓力 을 強化하여 韓半島에서 힘의 均衡을 파괴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의 軍事戰略에 대한 方向을 정확히 分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經濟難을 겪으면서도 100萬이상의 現役軍을 維持하고 GNP 25% 이상을 軍事費 에 支出하면서 왜 大軍事力을 유지해야 하 는가?

國際情勢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70%의 地 上軍과 스커드 미사일 등 尖端武器의 前進 配置 그리고 5,000餘t의 化學武器 生産에다 가 그것도 부족해서 核武器開發을 왜 試 圖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深思熟考해야 할 일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東西和解와 軍事的 緊張이 減少되고 있는 現狀況에서 唯一한 威脅要素는 바로 北韓의 軍事力인 것입니다.

만약에 對話를 持續하기 위하여서 아무 實效없는 것을 알면서도 크게 양보하여 不可侵宣言을 수락한다면 北韓은 아무런 責任 과 負擔도 지지 않을 것이나 우리는 엄청난 代價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自명한 것입니다.

北側의 意圖대로 進行되어서 만약에 韓半 島에 힘의 均衡이 깨진다면 國內政治에 대 한 엄청난 負擔과 南北相互의 不信은 더욱 깊어지고 자칫 南北間 軍備競爭에 불이 붙

어서 또다시 浪費와 消耗로서 對決이 계속 된다면 우리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면서 이 問題를 提起합니다.

따라서 성급한 不可侵宣言보다는 現 休戰 協定體制가 오히려 效果的인 장치이며 이를 紛爭解決體制나 交流支援制度등을 마련하여서 現 休戰協定을 補完하는 것이 더욱 더 現 實的이고 效果的이라고 思料되며 또한 우리 는 무엇보다도 먼저 緊張을 완화하고 信賴 構築을 우선 課題로 하고 그 다음 段階로 서 軍備縮小問題에 접근함으로써 民族의 平 和的인 統一이 達成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 입니다.

결론적으로 世界 各國이 北韓의 戰爭挑發 可能性을 警告하고 있는데도 이 땅에서는 平和라는 지나친 幻想과 希望에 젖어서 有 備無患의 精神을 忘却할 憂慮가 있음은 심 히 有感스러운 일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平和時代가 온다 할지라도 軍은 國家의 最後堡壘로서 國家安保에 渾身の 努力을 다해야 하며 北韓의 變化가 없는 한 확실한 抑止力을 갖추고 駐韓美軍의 撤收에 對備하여 완벽한 早期警報體制의 確立등 南 北戰力의 均衡維持는 必須不可缺하여 이는 어떠한 一部 輿論과도 迎合할 수 없는 國家生存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政府는 國防管理의 改善, 豫算節減 을 위한 뼈를 깎는 自己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聖域視되어 왔던 國防 豫算分野 그리고 國防政策 등을 國民에게 公開해서 共感帶를 形成 國民들의 절대적인 支持와 사랑을 받는 우리 軍이 되어 주기 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時間 傾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副議長 金在光 다음은 民主黨의 釜山東區 出身 盧武鉉議員께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議員 釜山東區出身 民主黨 盧武鉉議 員입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本會議에 빈 자리가 많다 離席이 많다 이런 지적이 참 많습 니다.

質問에 대해서도 또한 對政府質問에 함께 자리를 하면서 무척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받으면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國務總理이하 國務委員 여러분들께도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당부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차례 對政府質問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어쩐지 答辯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어물쩍 넘어가버리고 美辭麗句는 잔뜩 늘어 놓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듣고 나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答辯을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명군장군해서 具體的으로 설득력있는 논리적 答辯은 없이 그냥 결론만 가지고 우겨대는 이런 答辯을 들으면서 本會議場에 앉아있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國會議員은 책임이 없고 國務委員의 答辯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答辯 또한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質問 방식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내세우고 우리 黨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 정말로 우리 國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常委에서는 충분히 거론이 되었지만 이 本會議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常委 議員이 아니고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質問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제 質問에는 제 所見을 별로 내세우지 않고 質問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도 答辯이 어물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質問 하나하나에 번호를 전부 붙여서 質問書를 드렸으니까 빠뜨림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별표를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자칫 보면 별표부분만 答辯하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答辯問題를 자주 물고 늘어지느냐 하면 어제 우리 黨所屬 議員께서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質問을 했습니다.

8,000餘名の 방대한 분량에 관해서 이 사람들의 나이와 本籍과 學歷과 交友關係, 그리고 종전의 活動, 處罰받은 經歷, 이것은 이 나라의 法務部나 警察이나 安全企劃部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資料가 상세히 기록된 8,000餘名の 명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答辯하라고 하니 國務總理는 우리는 모른다 아마 관계된 會社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전부 우리 韓國사람만 사는 그래서 머리가 까만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머리가 노란 서양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가 노란아이를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애는 내 아이가 아니다 애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억지입니다. 누가 이것을 곧이 들겠습니까? 이런 答辯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책임있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野黨議員께서 地方自治團體長의 選舉日程에 관해서 質問을 드렸습니다.

그 質問內容은 분명히 地方自治團體長의 選舉를 地方議員의 選舉와 동시에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地方自治團體長의 選舉를 大統領選舉 이후로 넘기자 이런 質問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하면 한다 못 하면 못한다 내 權限事項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答辯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뭐 政治하는 분들과 또 누구와 의논해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調整해 보겠다 國務總理가 조정할 權限이 있습니까? 法에 명백히 규정된 것을 與野間의 합의에 의해서 法律로 만들어 놓고 國民들에게 공포한 것을 國務總理가 여기서 어물어물 그렇게 答辯하면 됩니까?

地方自治團體長의 選舉를 大統領選舉 뒤로 미루자는 것은 그것은 大統領選舉할 때 자기들이 任命한 地方行政公務員으로 하여금 官權 行政選舉 不正選舉를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 國務總理가 왜 말려듭니까? 저는 質問을 처음 맡으면서 野黨은 왜

與黨을 헐뜯기만 하느냐? 칭찬도 좀 해 봐라. 우리 韓國政治도 이제 서로가 칭찬하는 그런 풍토를 한번 만들어 보자 말씀을 듣고 참 一理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현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政府가 이 6共政府가 政治經濟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해 버렸고 能力도 없고 失政에 失政을 거듭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 政治經濟를 오늘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아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統一外交 部門에 관한 限 좀 자신있게 業績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칭찬해 줄게 안 있겠나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統一 統一 떠들기는 떠드는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저로서도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어떤 政策이 나왔는데 조금 있다 보면 그 政策은 어디로 가 버렸는지 없습니다. 느낌은 무엇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금방 統一이 될 듯이 들면서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 것도 없어져 버려서 헛갈리고 이런 것이 전체의 지금 統一 政策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원님은 아직 버선도 신기전에 행차 나팔만 요란하게 불어대서 나팔소리 듣고 쫓아 나가보면 원님은 없고 나팔만 지나가는 이런 것이 지금의 統一外交政策이다.

특히 統一部門에 대한 政府의 요란한 선전이다. 그리고 또 좀 더 들여다 보니까 統一이든 外交에 관한 것이든 우리 政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美國한테 물어 봐야 돼요. 政府가 무엇인가 하려고 발표를 했다가 뒤에 안 되는 것을 보면 國內에서 安保關係者들의 발목잡기도 있지만 根本的으로는 美國때문에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나는 이 두가지에 의문을 가지고 몇가지 質問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번호는 하나하나 붙이지 않겠습니다.

統一院長官께 묻습니다.

지난 9月25日 盧大統領은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과 北韓의 高麗聯邦制를 한데 묶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金日成 一黨體制도 主體思想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신문에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聯邦制 統一方案을 수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方向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이 수정될 것인가 무엇인가 또 좀 달라질건가 기다려 보았는데 그 직후에 또 大統領은 서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한다는 뜻이지 우리의 한民族共同體方案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쭙습니다.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을 그대로 두고 北韓의 高麗聯邦制의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조정한다는 뜻입니까?

主體思想과 金日成 一黨體制도 인정하는 統一方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大統領은 金日成 一黨體制도 主體思想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政府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國家保安法은 폐지할 수 없다고 答辯하니 大統領의 發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그러니까 大統領의 發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質問입니다.

高麗聯邦制 내용중에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의 수정없이 받아들이고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시오.

당시 盧大統領의 發言은 統一院 기타 政府의 어느 책임있는 部署와 사전에 政策的 檢討를 거쳐서 發表된 것입니까 아니면 盧大統領 개인의 즉흥적 발상입니까 따라가신 비서 몇 분의 구상입니까? 이것도 밝혀주시시오.

政府에서 만일에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部署가 어떤 部署와 어떤 協議 節次를 거쳐서 檢討했으며 盧大統領에게는 언제 누가 어떻게 報告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시오.

大統領의 統一問題에 관한 發言의 신빙성과 무게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政府는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을 吸收統一方案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答辯해 주십시오.

政府는 統一3原則으로서 自由 平和 民主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民主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民主는 統一의 과정과 절차에서 적용될 원칙입니까 아니면 統一 이후의 體制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政府의 확정된 견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金學俊 大統領政策調查補佐官은 今年 7月 東亞日報 주취 심포지움에서 獨逸의 統一은 吸收統一이라기보다는 合流統一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우리 統一도 이같은 방식으로 成就될 것으로 본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어떤 月刊誌에 의하면 統一院 政策室의 한 高位當職者는 吸收나 아니냐는 얘기할 必要가 없고 우리 方案으로 合流해 들어오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靑瓦臺 한 秘書官은 北韓을 밖으로 끌어내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方案이 우리의 統一方案이다 또 外交安保研究院의 어떤 관계자는 UN加入의 경험을 볼 때 對北政策은 앞으로도 外壓을 통해서 변화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發言을 했다고 報道되고 있습니다.

이런 發言 報道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盧大統領은 9月25日 윌스트리트 저널紙와의 會見에서 北韓이 經濟적으로 붕괴한다 하더라도 北韓을 吸收統一할 생각은 없다 西獨이 東獨을 吸收統一한 후의 問題點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報道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이 발표된지 2년이 넘은 이 時點에서 똑같은 獨逸의 統一方式을 놓고 盧大統領은 이를 吸收統合一이라고 규정해서 이대로 따라가면 안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大統領의 補佐役과 政府關係者들은 合流統一이라거나 또는 그와 같은 양식을 그렇게 용어를 쓰면서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이것 答辯해 주십시오.

吸收는 무엇이고 合流는 무엇입니까 말장난 아닙니까?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統一方案은 大統領의 統一方案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補佐官들이 말하는 방안이 맞는 것인지 보통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로 책임있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國務總理께 물겠습니다.

10月4日字 朝鮮日報에 의하면 不可侵宣言과 南北交流를 일괄 타결하는 것을 南北高位級會談에서 提案할 것으로 報道되었는데 이것은 政府의 公式立場인지 묻습니다.

또 이 제안에는 어떤 전제조건이 붙어 있으며 北韓은 이 전제조건을 포함해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答辯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 10月9日字 施政演說에서는 國務總理께서 검토수준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會談에서 提案할 것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 안 되었는지 딱 부러지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統領은 UN總會演說에서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전환 平和協定の 체결을 주장했습니다. 平和體制라는 用語는 과거에도 사용되었지만 平和協定이라는 用語는 90年 8·15慶祝辭에서 가볍게 언급된 것 이외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平和協定の 提案은 새로운 것입니까 이 提案에서 平和協定の 當事者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는 平和協定の 當事者에 관해서 北韓은 美國을 當事者로 주장하고 南韓은 우리가 當事者다 이렇게 주장해서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統領이 이런 새로운 提案을 할 때에는 이런 차이점을 극복할만한 무슨 代案이 있길래 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아무런 그것도 없다면 北韓을 고립시키자는 對外宣傳用이거나 UN분위기에 편승해서 國內 사람들에겐 분위기 떠우는 政治宣傳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答辯해 주십시오.

10月9日字 한국일보의 報道에 의하면 政府는 平和協定の 當事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安保理 또는 總會에서

韓國을 休戰當事者로 확인받는 方案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報道가 있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UN總會나 安保理에서는 이런 확인을 해 줄 것으로 보시는지 UN이 이렇게 확인한다면 北韓이 平和協定에 南韓을 當事者로 해서 응해 줄 것인지 하나하나 答辯해 주십시오.

南韓이 實質的 交戰當事者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北韓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休戰協定文上の 署名者인 UN軍司令部라는 것도 有名無實하고 美軍이 實質的 交戰當事者이면서 지금까지 韓半島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기준으로 보면 南·北韓과 美國을 함께 當事者로 보는 것도 合理的이고 現實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政府는 折衷案으로서 南北 그리고 美國을 平和協定の 當事者로 하는 折衷案을 提案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하면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統一院長官께 묻겠습니다.

第155回 臨時國會에서 政府는 10月中旬에 政治 軍事 經濟등 각 분야에 걸쳐서 統一對備策을 마련하여 靑瓦臺에 報告하고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0月中旬이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었는지 어떤 방향의 것인지 그 개요라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統一對備策은 南北關係改善 또는 統一을 이루는 과정과 方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北韓의 변화에 대비하고 統一이후에 對備한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獨逸의 統一은 우리에게 많은 教訓을 주고 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政府는 구체적으로 獨逸의 統一過程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西獨에도 우리나라의 國家保安法과 같은 法이 있는지 民主主義로서의 基本法 그것 말고 國家保安法 말입니다. 있다면 東獨과의 關係에서 그 法으로 처벌받은 사람

의 數字가 지금까지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書面에 나와 있는 1-3 표시는 묻지 않겠습니다. 1-4로 넘어가 묻겠습니다.

國家保安問題에 대해서도 155回 臨時國會에서 改正用意에 대해서 北韓의 對南赤化戰略이 변화되지 않는 만큼 바꿀 용의가 없다 이렇게 答辯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外務委에서 野黨委員이 과연 北韓이 對南赤化遂行能力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能力의 문제가 아니라 意圖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아울러서 北韓의 입장을 수용하는 양보조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랬더니 北韓이 社會主義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答辯했습니다.

그런데 獨逸의 경우를 보면 68년에 東獨이 社會主義를 강화하는 내용의 憲法改正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9년에 빌리 브란트는 東方政策을 宣言했습니다.

그리고 74년에 東獨이 다시 이 憲法을 강화해서 蘇聯과의 同盟關係 國際社會主義의 입장을 더욱 더 강화하는 方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經濟援助와 開放往來 그리고 經濟的 支援 이런 東獨에 대한 開放措置를 끊임없이 實施함으로써 끝내 東獨을 開放으로 끌어냈다고 봅니다.

과연 社會主義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大統領의 主體思想도 인정한다는 것 金日成 一黨體制도 인정한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政府가 이에 상응하는 어떤 對策을 검토하고 있다면 그 對策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北韓의 텔레비전을 開放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開放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을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院長官께 묻습니다.

政府組織法 23條2項에 의하면 統一院은 統一 및 南北對話, 交流協力에 대한 綜合的 基本政策의 樹立 그리고 이에 의한 企劃 綜合調整, 統一에 관한 事務를 관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체 統 院은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南北對話協商時에 協商代表들은 安企部の 쪽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南北對話事務局은 누가 組織하고 누가 指揮합니까? 事務局內의 安企部出身 職員의 數字와 前現職 職責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7宣言 7·20民族大交流宣言 91年7月6日 曼谷宣言 등 이 때의 大統領宣言은 사전에 統一院이 立案 建議한 것인지 아니면 大統領側近 몇 사람이 내놓고 統一院은 6萬餘通의 謝過便紙 보내느라고 뒤치다거리만 하느라고 진땀만 흘렸는지 이것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統一政策에 관해서 靑瓦臺秘書室 따로, 統一院 따로, 安企部 따로, 또 어떤 實力者의 密室外交 따로, 이렇게 해서 손발도 맞지를 않고 시각에 있어서도 統一院과 靑瓦臺는 상당히 前進的이고 開放的인가 하면 또한 安保關係部處에서는 事事件件 舊時代의 冷戰的 思考를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 되는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大統領이 해놓은 얘기가 전부 나중에 執行過程에 들어가면 알맹이가 빠져 버리는... 가득이나 政治 經濟... 우리 國民들이 大統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治績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統一外交 이 分野에 있어서까지 大統領이 거짓말쟁이로 되어서야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것입니까?

(「필 거짓말 했어요?」하는 議員 있음)

지금까지 설명드려도 못알아 들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자! 다음 質問합니다.

對決의 時代에서 反共業務에만 종사함으로써 冷戰的 思考에 굳어져 있는 安企部가 開放과 和解의 時代에 統一政策에 관여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安企部를 統一業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副總理로 격상된 統一院의 位相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超黨外交가 무엇인지 한번 물

어 보려고 합니다. 超黨外交를 할 때 與黨은 어떻게 해야 하고 野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具體的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與黨이 모든 情報를 독점하고 政策決定도 마음대로 하고 國會에서 물어도 對答도 안해 놓고 野黨은 따라만 오라 들러리 서라 이런 것이 超黨外交입니까?

超黨外交를 잘 하고 있는 다른 나라 政府 與黨이 野黨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模範的 事例 몇 가지만 이것도 良心的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政策은 立案하고 執行함에 있어서 野黨 및 各 社會團體 그리고 國民의 輿論收斂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構成되어 있는 輿論收斂機構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 機構들이 政府의 統一政策의 수립에 具體的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具體的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밥 먹고 박수치고 헤어지는 것은 統一政策機構가 아닙니다. 輿論收斂機構가 될 수 없습니다.

獨逸統一의 敎訓에서 배우듯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끈질긴 對話와 妥協 그리고 획기적인 讓步, 자기를 버리는 讓步가 필요합니다. 과감한 讓步없이 는 결코 統一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政府에게 과감한 讓步를 촉구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하나 提案을 드립니다. 우리 民主黨은 지난번 統合의 과정에서 진지한 對話, 忍耐하는 對話 그리고 자기 몫을 버리는 讓步의 美德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統一政策 政府에서 혼자 손에 쥐고 하지 말고 우리 野黨한테 한번 맡겨볼 생각 없습니까? 그럴 용의가 없으시면 지난번 代表演說에서 우리 黨의 李基澤代表께서 제안하신 政府 政黨 民間團體 등이 함께 참여하는 民族統一汎國民協議會를 구성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國防長官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美國은 여러차례 韓半島에서 核使用을 檢討하기도 하고 核使用이 고려되는 가상적 전쟁상황을 거론했고 그것이 보도되었습니다.

公式적으로 발표되었거나 또는 議會 그밖의 공식 비공식으로 보고내용과 책임있는 軍當局者의 發言으로써 보도된 내용들을 빠짐없이 여기에 公開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美國의 발표와 함께 美國이 韓國과 사전에 협의한 일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거나 통보된 바도 없다면 그래도 좋은 것인지 앞으로 美國 마음대로 이런 소리 하게 내버려 두어도 우리는 관계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지금 美國의 核武器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어디입니까?

그 중에서 NCND정책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어느 나라입니까? 先進國중에도 있습니까?

유럽 각국은 美國의 核武器提供을 받더라도 그 核의 종류와 위치, 수량, 반입과 반출, 위치변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또 이것을 議會에 報告하고 同意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同盟國들은 美國의 독단적이고도 자의적인 核武器使用을 규제하기 위해서 5個國 核協議會를 구성해 가지고 美國核戰略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더구나 統一前 西獨은 西獨配置 核武器가 東獨을 목표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核武器配置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韓國은 核配置에 대해서 정보제공, 國會同意, 전략관여, 배치조건 이런 점에 있어서 유럽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韓國의 主權만은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國防長官은 國會에서 다른 나라와는 地域戰略的 상황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地域戰略的 사정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사정이 다른지 具體的으로 밝혀 주시고 그 사정이 核에 대한 主權制約의 근거가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大統領이 핵철폐선언을 할때 韓國政府와 협의했습니까?

부시大統領의 核撤收計劃에는 駐韓美空軍核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도 한참 갈팡 질팡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空軍核이 가지 않는다면 韓半島에서 核撤收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놓고 空軍核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北韓은 美軍이 核을 철수하게 되었으므로 核査察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연계해서 政府가 발언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大統領이 東北亞 非核地帶化 제안을 했던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알맹이도 없는 선전보고 김치국마신 꼴 아닙니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美國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北韓에 대해서 核武器를 사용할 것을 公開的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1983年2月 와인버거 國防長官은 秘密報告書에 의해서 中東에 있어서 유사시에... 東北아시아의 同盟國 軍事力으로 하여금 北韓을 공격케 하고 美國은 北韓에 대한 核攻撃을 감행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91年 지난 3月1日 國防長官이 美軍兵力 20萬을 투하하는 韓·美兩國 政府의 對北韓 기습 선제공격계획을 담은 120日 고강도 전쟁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하고 리스카시 駐韓美軍司令官이 지난 3月13日 議會報告書에서 金日成과 北韓은 후세인과 이라크보다 악질이다 사막의 이라크와는 달리 北韓의 지형 때문에 空軍力만으로는 北韓의 섬멸이 어려우므로 지상전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린파웰 대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때려잡아야 할 악마가 이제 몇 남지 않았다 金日成과 카스트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 이어서 우리 國防長官은 엔테베식 작전을 얘기했습니다. 이것 美國하고 합의했습니까? 이것... 그만 그 정도 美國하고 합의했었지만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입장이 바뀌게 되면 두렵지... 우리 國防長官은 두렵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盧泰愚大統領의 非核地帶化宣言에 대한 지

금까지의 中國 北韓 蘇聯의 기존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美國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東北亞 非核地帶化宣言은 결국 다른 나라 보다는 美國때문에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美國과 무슨 협의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부시가 한件 하나까 우리 大統領께서도 그냥 별 생각없이 한件 하신 것인지 이것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副議長 金在光 다음은 民主自由黨의 崔在旭議員 나오셔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在旭議員 民主自由黨의 崔在旭議員입니다.

統一·外交·安保에 대한 質問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 野黨議員 質問에서도 舉論된 바 있어 묻습니다.

어제 國務總理께서 選舉日程에 관해 答辯한 내용이 言論에 來年度 選舉日程 再檢討라는 것으로 報道되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두어야 할 일입니다. 정말 再檢討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政府는 來年度 選舉日程을 조정할 생각인지 具體的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議會主義 愛護者와 報道陣 여러분!

世界 共產主義 宗主國인 蘇聯에서 共產黨이 해체되고 그에 뒤이어 現代史를 리드했던 美·蘇 두 強大國이 核減縮措置를 취하게 됨으로써 理念과 理念이 맞붙었던 冷戰時代는 종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46年間의 冷戰時代, 불행히도 그 最一線에서 世界大戰때 以上の 희생을 치루어야 했던 우리 民族으로서는 실로 착잡한 감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가해진 고통은 冷戰의 시작과 더불어였습니다. 第2次 世界大戰의 종말과 함께 해방을 얻은 우리 民族은 곧바로 치열한 左右翼鬭爭의 소용돌이에 빠졌으며 이때문에 國土가 두동강나고 이어 처참한 同族相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1·21사태라든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참사사건 등 流血事件이 일어났는가

하면 休戰線에서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不眠의 밤이 그리고 국제무대에서는 상호비방과 出血外交를 위한 분주한 일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理念의 生産地도 아닌 韓半島가 왜 이처럼 決死的인 理念의 過消費地帶가 되었는지 야속한 世界史의 심술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本議員은 아웅산墓所 參拜隊列에서 열일곱분을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고 九死一生으로 목숨을 건진 처지에서 그 비통함이 몇 배나 더 진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總理께서 施政演說을 낭독하신 어저께가 事件 8周年이 되는 날인데 그 날 國立墓地를 참배하면서 本議員은 이러한 歷史의 심술이 왜 우리 民族에게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悲感이 새삼스러웠습니다. 冷戰이 끝난데 대해 그 勝戰國도 敗戰國도 함께 어우러져 나누는 저 큰 길의 환호성속에서 우리만은 우중충한 갖길에 쓸쓸이 앉아 있는 격입니다. 北韓의 金日成政權은 理念戰爭終熄에 同意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理念의 옷깃을 더욱 끈추세우고 있으며 심지어는 核武器 生産이라는 옷깃을 마저 내밀어서 이 地域의 緊張度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冷戰이라는 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앓았고 또 그 病을 가장 最後까지 앓는 그러한 運命의 所有者가 되었습니다. 아까 어느 議員께서 冷戰時代는 흘러갔는데 政府안에 아직도 冷戰時代의 思考에 젖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冷戰이 하루빨리 흘러가야 한다는 當爲性에 대해서는 저도 全的으로 贊成입니다마는 무슨 미련에서인지 이 韓半島만은 계속 떠나지 않고 머물러있는 이 冷戰의 罔연한 존재만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否認한다고 해서 眞實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우리의 비애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전 이 자리에서 있던 交涉團體代表演說에서 金泳三 代表最高委員과 民主黨의 李基澤 共同代表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國際秩序의 胎動으로 世界 各國은 치열한 經濟戰爭에 들

입하게 되었다는 分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제 冷戰 즉 理念戰爭의 무거운 制服을 벗고 아주 경쾌하고 자기 기호에 맞는 편의복으로 갈아입은 채 國家發展과 成長의 쟁기질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理念戰爭과 經濟戰爭을 동시에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兩者는 그 原則과 手段 그리고 目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저희들의 고뇌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세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난관을 기피하거나 迂迴할 수는 없습니다. 온 겨레의 에너지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정리하고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 本議員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目錄부터 들어보는 것으로 對政府質問을 떠나갈까 합니다.

첫째 國務總理에게 묻습니다.

理念戰爭時代에 우리에게서 敵과 同志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經濟競爭의 새로운 질서에서는 원리상으로 敵과 同志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蘇聯 大統領의 救命을 위해서 美國 大統領이 사흘 밤낮으로 勞心焦思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지난 여름의 一幕劇이야말로 그러한 사정을 웅변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敵이 없다는 것은 同志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同志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敵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사정을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經濟戰爭은 萬國의 萬國에 대한 鬭爭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戰爭을 아울러 치러야 하는 우리로서는 매우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友邦이 있는 理念戰爭과 그리고 友邦이 없는 經濟戰爭을 동시에 치르자면 우리가 國際의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고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敵이 있는 우리가 敵이 없는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어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기도 합니다.

變化의 時代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천착과 정리를 先決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에서 總理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둘째 外務部長官에게 묻습니다.

첫째 質問에 대한 答辯이 다소 추상적일 것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실무적인 答辯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아닌 日·北韓 修交問題입니다.

日本은 그동안 여러가지 방법과 과정을 통해 北韓과의 修交를 추진해 오다가 北韓의 核査察拒否를 이유로 이 작업에 일단정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核査察問題가 매듭이 난다면 그 방향으로 다시 直進해 나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外務部는 日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와 유감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理念戰爭의 樣態와 經濟戰爭 樣態가 갖는 相異點을 극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日本에게 對北修交의 자제를 요청한 것은 그들을 理念時代의 友邦으로 여겨서입니다. 그런데 日本은 理念次元에서가 아니라 經濟時代의 次元에서 對北接近을 모색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日本에게 北韓을 理念戰爭 때처럼 경제의 대상으로 삼아 달라는 주문이나 理念의 고리를 벗어버린 日本은 經濟問題에 있어서 이제 北韓은 敵도 警戒對象도 아니라는 자세입니다.

日本과의 修交 그리고 經濟協力이 北韓에게 있어서는 南韓과의 政治競爭 軍事競爭을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援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철저한 凝視와 對處를 해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理念時代의 言語와 情緒만으로는 日本이 설득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새로운 對處論理를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줄로 압니다.

특히 이러한 사태는 日本만이 아니라 종전의 다른 友邦에게도 續發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종합적인 對策에 분명한 答辯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세번째로 副總理兼統一院長官에게 묻습니다. 世界秩序의 再編이 우리의 統一問題에 어

던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즉 韓半島統一을 바라보는 世界人의 內心에도 어떤 미묘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本議員은 이런 풀이를 해봅니다.

중전 世界 各國은 우리의 統一問題에 대하여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冷戰이 언제 熱戰으로 변할지 모르는 긴장된 판국에서 韓半島의 南北雙方이 서로 대치한다고 하는 것은 第3次世界大戰의 뇌관을 이 곳에 방치해 놓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韓半島가 統一됨으로써 이 地域에서 뇌관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人類平和를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며 따라서 世界人들은 心的이거나 物的이거나 간에 韓半島統一을 위해서 支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人類의 마음속에서 世界大戰에 대한 不安은 安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韓半島統一에 대한 그들의 자세도 希願에서 傍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나라에 따라서는 韓半島가 南北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도리어 자기나라에 利益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日本의 對北修交問題만 해도 그러한 心理變化의 한 측면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注目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統一樂觀論에 젖어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가을이 다 가도록 끝내 감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드디어 까마귀의 밤이 되고 마는 紅柿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번재로 統一問題에 관해 北韓政權의 자세변화는 없을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하나의 祖國이나 두개의 祖國이나 라는 논쟁에서 그동안 北韓은 하나의 祖國論者, 우리는 두개의 祖國論者라는 식으로 혼란해오며 왔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우리 측이 統一이라는 목표와 함께 平和定着이라

고 하는 그 중간과정도 똑같이 중시하는데 반해 北韓側이 平和定着의 단계를 생략한 方法 즉 武力赤化 내지 南朝鮮左派革命에 의한 統一을 그 동안 즐기차게 추구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측이 추구했던 방법은 원래부터 可能性이 전무했던 것이며 우리가 주장한 方法이야말로 統一로 가는 가장 合理的이고 확실한 方法이라는데 대해서는 두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의 祖國論者는 바로 남쪽이었다고 本議員은 자신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면 言語論爭일지도 모를 이 문제를 이렇게 꺼내는 것은 작금의 情勢推移와 관련하여 北韓쪽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의 祖國을 여전히 되뇌이고 있지만 內心으로는 두개의 祖國쪽으로 體重移動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昨年 東獨이 西獨에 흡수된 데 놀란 그들은 「우리식대로」라는 팻말을 全國 방방곡곡에 내걸었고 金日成은 지난 10月4日 中國 指導者와의 會談에서 그들의 聯邦制統一方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왜야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吸收統一할 수 없다」고 獨逸式統一에 대한 강한 拒否感을 표시했습니다. 또 지난 5月 IPU平壤會談때 尹基福 勞動黨 國際擔當書記가 記者會見에서 「南北 두개의 政府가 暫定的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 外交와 軍事權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비록 「暫定的으로」라는 단서가 달린 했지만 그들이 그토록 주장해온 聯邦制의 政治的 內實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構想이라는 점에서 意味深長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政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사태가 더 미묘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祖國이라는 원래의 우리 意志를 힘주어 못박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들이 두개의 祖國으로 자꾸 作戰을 바꿀때 우리까지도 同調하는 것으로 구실을 이용당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에 하나 묻겠습니다.

두개의 祖國論에 악용될지도 모를 先平和定着의 段階를 우리가 굳이 固守할 必要性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統一을 쌍방이 원한다고 한다면 미리 우리가 주장을 내놓지 않더라도 어차피 平和定着段階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꼭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平和定着段階의 생략이 꼭 流血統一이나 赤化統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東·西獨에서 이미 우리는 예상되어왔던 여러 단계가 사실상 거의 생략되고도 平和的 統一 民主的 統一을 성취한 전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質問은 北韓에 있어서 統一의 진실된 主體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自由民主主義國家와는 달리 共產國家의 모든 政策은 철저히 黨으로부터 나오고 黨은 黨首 한 사람의 생각에 左右됩니다. 바로 北韓이야말로 그 克明한 표본인 것입니다.

따라서 政權과 住民간에 統一에 대한 利害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北韓은 워낙 閉鎖的이어서 住民의 진정한 의사가 客觀的으로 검증되기 어렵습니다마는 黨의 의사와 관계없이 早速統一을 열망한 東獨國民 그리고 역시 黨의 의사와 무관하게 民主化를 절규해서 드디어 이를 쟁취한 東歐羅巴 여러 나라 國民의 예를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할 때 우리의 統一政策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하는 問題가 提起됩니다.

本議員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統一을 하더라도 金日成과 의논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感情的인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窮極的인 목표 즉 統一을 이루는데 더 效率的인가를. 냉철하게 비교해 보자는 뜻입니다.

共產主義가 宗主國에서 뿌리채 뽑힌 지금에도 이 지구상에는 네개의 共產國家가 남아 있습니다. 北韓과 中國 쿠바 베트남입니다. 北韓 中國 쿠바의 實權者는 共產執權第一世代이고 베트남의 實權者는 共產統一世代라는 점에서 共通點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人之常情이겠지만 어떤 나라나 制度든 간에 그것을 이룩한 第一世代는 修正과 變化를 拒否하기 마련입니다. 各國 共產黨의 연이은 퇴조 가운데서 黨首가 黨의 해체를 직접 주도한 경우는 蘇聯의 고르바초프뿐입니다. 國民輿論의 압력이라는 요소도 있었지만 그가 共產黨을 創業한 世代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레닌이 죽은 후 출생했으며 모스크바法大生으로 있을 때 스탈린의 사망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몇 大學生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동안 統一問題를 놓고 여러 차례 南北對話를 나누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構造的인 요인의 한 단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共產化 一世代가 權力을 잡고 있는 이상 統一論議의 劃期的인 진전은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젠 現段階에서 統一論議는 當局者채널에서 전개할 수 있을 뿐 다른 代案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北韓 當局과 住民間에 利害相衡이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北韓住民의 統一意志가 희생을 받거나 또는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심히 배려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政府의 입장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 質問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問題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北韓住民을 統一의 진실된 主體로 볼 때 그들이야말로 우리 남쪽 사람들을 더더욱 철저히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南北의 人的인 交流야말로 진정한 統一으로 가는 첩경 그것입니다.

政府는 그 동안 民間의 交流協力 확대를 통한 民族共同體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一例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과 南北協力 基金法을 制定하여 각 분야의 交流協력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法的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한편 高位級會談에서도 南北間 자유로운 통행과 通信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들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統一院에서 발간된 南北交流協力動向이라는 資料에 따르면 法律制定 이후 865件的 北韓住民 接觸申請中 800餘件이 이미 承認되었으며 不許되거나 一時留保된 것은 66件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南北往來가 이루어진 것은 當局會談이나 蹴球評價戰 등 準政府的인 왕래에 국한되어 있으며 對民次元의 순수한 民間往來는 지난달 郭善熙牧師의 訪北外에는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民間往來가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89年 香港駐在 박승준記者 등의 訪北問題도 처음에는 北韓側이 招請意思를 밝혔으나 막상 우리 政府가 許可하자 北韓側이 비자발급을 거부함으로써 訪北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필성씨의 老母의 相逢을 위한 訪北이나 장논부 할머니의 아들 相逢을 위한 訪北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高位級會談은 물론 對民間의 南北往來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政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北韓側의 態度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統一院長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統一韓國의 安保像에 대하여 國防部長官에게 물고자 합니다.

東北아시아에는 美·蘇·中·日의 4強이 모든 분야에서 각축을 하고 있으며 특히 軍事的인 면에서는 더욱 銳角的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 나라는 한결같이 우리 韓半島를 占領한 前歷이 있으며 綜合的인 國力에서 世界 第 1·2·3·4位의 나라이고 軍事力은 특히 그러합니다.

美·蘇의 軍事力이 世界 最強임은 自他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中國은 지금도 軍事強國이지만 世界가 사실상으로 사용불능한 武器인 核競争을 벗어나고 在來式武器에 의한 戰爭文化가 정착될 경우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假說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中國語로 發行되는 香港新聞이 지난달 社說에서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日本도

마찬가지입니다.

1985年 日本防衛大學 卒業式때 당시 나카 소네首相은 風雨深山臥龍이란 휘호를 쓴 일이 있습니다. 즉 風雨가 심해서 龍이 지금은 深山에 조용히 누어 있노라하는 뜻이지만 때가 되면 하늘로 용솨음치겠다는 강력한 示唆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가 金顯煜議員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日本은 軍事力의 면에서 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世界 4強의 파워게임網에 둘러싸인 우리는 어떠한 安保觀과 安保態勢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가지 이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어느 社會나 마찬가지로 1·2·3·4等에 위치해 있는 자가 모두 함께 同盟을 맺는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經濟同盟이나 軍事同盟이나 간에 東北亞는 EC같은 지역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4強이 우리 韓國의 位相이나 역할에 대해 바라는 바가 제각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希望的으로 볼때는 우리가 4強의 均衡子로서 실로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도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主體的인 力量을 구비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議論相對 하나 없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正體性不在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일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낭패를 면하자면 우리는 단순히 땅의 安保, 사람의 安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격의 安保, 國威의 安保까지를 염두에 둔 巨視的인 비전을 定立해 놓지 않으면 안되며 그런 점에서 韓國 防衛의 韓國化라는 문제는 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國防部에서도 이미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UN問題에 대해 물고자 합니다.

UN加入은 우리 政府樹立 以來 일관되게

추구해온 外交的 宿願이었기 때문에 온국민의 경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40餘年間 우리 民族은 國際社會의 冷戰的 構造로 인해 우리의 의사에 反하는 수많은 犧牲과 不利益을 감수하여야만 했습니다. 이제 南·北韓의 UN加入을 계기로 우리는 國際情勢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能動的이고도 主導的인 努力에 의해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특히 이번 우리의 UN加入은 그것이 남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主體的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쟁취한 결과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和解무드라는 國際輿件 變化에도 힘입은 바 크다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盧大統領이 이러한 國際情勢를 파악하고 확고한 방침과 신념으로 추진해온 北方政策의 성공적인 결실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UN加入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그에 도취되거나 만족해서는 안되며 UN加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로써 얻어진 우리의 위상변화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위에서 未來를 대비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盧大統領이 9月24日 UN總會 演說에서 韓半島 平和定着과 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세가지 原則을 천명하고 國際社會에서의 역할을 다짐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훌륭한 構想이나 原則을 표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를 具體化하고 實踐에 옮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外務部長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마지막으로 이른바 새 시대라는 것이 強大國들의 체질을 변모시키고 있는데 대해 本議員 나름의 시각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대응책을 묻고자 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國力の 構成要素를 經濟力 軍事力 知識力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冷戰時代는 그러한 構成要素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특이한 타이프를 가능하게 해주

었습니다. 知識力 문제는 다소 抽象的이어서 접어두고 經濟力과 軍事力만을 고려할 경우 蘇聯은 軍事力은 강한데 經濟力은 부실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반대로 日本은 經濟力은 엄청나게 강한데 軍事力은 몇年前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美國의 경우 軍事力으로서는 世界의 警察로 통할 정도이나 經濟問題에 있어서는 對外赤字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不均衡은 아메리칸 데모크라시와 소비에트 코뮤니즘이 第2次世界大戰 이후 지금까지 줄곧 치열한 軍事力 競爭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나친 體力消耗를 한 탓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日本은 敗戰國으로서 他律的으로 武裝禁止가 된 것이 轉禍爲福이 되어 經濟面에 전심한 결과 오늘과 같은 막대한 經濟力을 축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冷戰의 종식과 더불어 엘빈 토플러가 말한 國力の 構成要素가 이제 比率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蘇聯이 共產主義를 버린 것은 어떻게 보면 經濟力을 軍事力에 접근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經濟問題에 그들의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美國도 對外赤字를 줄이기 위한 가위 必死的인 노력을 이미 몇年前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日本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軍事力을 經濟力에 비슷하게 접근시키기 위해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各國의 이러한 國力要素 再調整 노력은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하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美國의 開放要求나 蘇聯의 經濟協力要請이 우선 그렇고 日本의 軍事大國化도 우리에게는 긴장스러운 事案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個別的으로 할지 몰라도 哲學은 綜合的인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어떠한 哲學을 가지고 있는지 總理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논리를 他國의 道德性

次元에서 발견하려 해서는 그렇게 해서만은 안된다는 점입니다.

비난이나 탄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의견한 對備態勢와 현명한 政策의 개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議長 그리고 同僚·先輩議員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國際的으로는 冷戰以後時代에 살면서도 韓半島에서는 冷戰時代를 그대로 살아야 하는 특이하고도 고독한 現實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목에 冷戰時代의 시계와 非冷戰時代의 시계 즉 時間表示가 각기 다른 두 개의 時計를 차고서 생활하는 격으로서 번거로움과 헛갈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지나치게 비판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選擇만 똑바로 한다면 그것은 負擔이 아니라 便利와 有用性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도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世界人이 구가하는 冷戰의 종식도 바로 우리가 해낸 일중의 하나입니다. 體制優越競爭의 第一線에서 우리가 피땀 흘려 성공을 거둔 것이야말로 바로 冷戰終熄의 決定的要因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보다도 建國 當時 우리가 國家基本法을 제정함에 있어 自由民主主義를 우리의 生活規範으로서 소신있게 선택했던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偉大한 成就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本議員은 우리 모두의 大先輩이신 制憲國會議員 諸位의 노고에 대해 民主國家建設의 아버지로서의 敬意를 표할 것을 議員 여러분께 정중하게 제의하면서 재 質問을 마칩니다.

長時間 敬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在光 이제까지 다섯분 議員의 對政府 質問이 끝났습니다.

政府側 答辯은 午後 2시에 續開를 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37分 會議中止)

(14時6分 繼續開議)

○副議長 趙尹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에 있었던 다섯분 議員님들의 質問에 대해서 行政府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國務總理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鄭元植 國務總理 答辯드리겠습니다.

오늘 午前에 質問해 주신 金德圭議員 金顯煥議員 玉滿鎬議員 盧武鉉議員 崔在旭議員 이상 다섯 議員님의 質問에 대해서 차례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德圭議員님께서 對蘇經協의 규모를 줄였어도 韓·蘇修交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 質問을 하셨습니다.

昨年 9月 韓·蘇間에 國交가 수립되고今年 1月 우리나라가 蘇聯에 30億弗의 借款을 供與기로 결정한 이래 지난 國會 本會議에서 政府立場을 答辯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對蘇經協을 전제로 한 修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韓·蘇兩國政府는 修交를 통하여 양국의 相互協力이 自國의 利益에 부합하여 넓게는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亞의 안정과 평화에도 필요불가결하다는 客觀的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外交史의 중대한 轉換點을 이룬 南·北韓 UN同時加入도 결국 우리의 北方政策 성공의 소산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30億弗의 對蘇借款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 借款資金은 改革을 추진하고 있는 蘇聯으로 하여금 經濟難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한다는 취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30億弗 借款中 20億弗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生産하는 消費財 原資材 그리고 플랜트를 輸入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市場開拓의 성격이 있으며 나머지 10億弗은 銀行借款으로서 蘇聯이 外債를 償還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國際金融市場의 利率이 적용되어 商業性도 충분히 확보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借款規模도 우리의 資金動員能力 범위 안에서 결정된 額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金議員께서는 國家保安法와 관련 拘束人士의 釋放用意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南北韓의 UN同時加入과 급변하는 國際社會의 脫冷戰時代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아직 開放과 和解의 물결을 거부한채 對南革命路線 등에도 可視的 變化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같은 現狀況에서 北韓의 路線에 同調하여 國家社會의 基本秩序와 安寧을 沮害하는 犯法行動으로 司法的 制裁를 받고 있는 國家保安法 違反者들을 無條件 釋放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政府는 이미 지난 번 國家保安法 改正에 따른 特別寬容措置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金議員께서는 冷戰的 思考에 젖어 있는 政府人事들을 退陣시키는 대폭적인 人事刷新을 단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行政府 내에는 金議員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時代的 潮流에 맞지 않게 硬直된 思考를 가진 人士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金議員님의 말씀은 더욱 진취적인 자세로 所任을 다해 달라는 간곡한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金議員께서는 이 이외에 日本 軍事大國化의 向後進行方向과 對韓半島 影響 및 이에 대한 우리 政府의 對策과 日本이 우리의 統一支援勢力이 될 것인가와 또 日本의 北韓에 대한 戰後45年 補償要求問題에 관한 政府의 立場과 太平洋戰爭 強制動員犧牲者의 戰後清算問題와 相關한 韓日間 論議內容과 蘇聯 中國 ASEAN諸國과의 關係에서 우리의 國益과 日本의 國益이 어떻게 충돌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專門的인 解答을 요구하는 質問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外務部長官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德圭議員님께서 豆滿江河口開發計劃에 대한 政府의 參與計劃과 日本의 立場에 대해서도 물으신 바 있습니다. 豆滿江河口開發을 위한 論議가 進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며 各國의 基本的인 立場을 협의하기 위하여 10月中으로 韓國과 中國 北韓 蒙古 등 4個國이 참여하는 實務會議를 開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政府는 금번 會議를 통하여 各國의 立場을 충분히 검토한 후 基本計劃을 확정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南北交流協力과 東北亞地域經濟協力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同事業에 대한 日本의 立場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日本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4個國 實務會議에는 出席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金議員께서는 各 部處에 分散되어 있는 對外情報蒐集業務를 統合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總理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현재 各 部處에서 業務와 相關하여 필요로 하는 對外情報는 주로 該當部處의 國際協力擔當部署와 在外公館 등을 통해서 蒐集活用하고 있으며 이러한 對外情報는 情報專門機關 등을 중심으로 汎政府的 차원에서 協議 調整해 나가고 있습니다.

各 部處의 業務關聯對外情報蒐集機能을 어느 한 機關으로 一元化하여 관장토록 하는 것은 各 部處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 수집의 適時性和 活用側面에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德圭議員께서는 계속해서 國家安全企劃部는 脫冷戰時代에 걸맞는 對外情報處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總理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蘇聯 東歐의 變化로 인해 冷戰體制가 와해되고 核武器를 폐기하는 등 平和的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편 이와같은 冷戰體制의 變化和 世界秩序의 再編은 우리나라와 같은 分斷國에게는 또다른 國家安保上의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南北韓이 UN에 가입하였다고 하거나 北韓對南戰略의 變化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國家安保關聯情報를

수집 처리해야 하는 國家安全企劃部の 역할은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安企部도 金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항들을 감안하여 역할의 보완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金議員께서는 第4次南北高位級會談에서 政府가 구상하고 있는 核關聯提議는 무엇이며 韓國에서의 核武器 撤收時期 美國의 核雨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韓半島核問題와 관련한 政府의 基本立場은 北韓이 核武器開發을 즉각 포기하고 核安全協定 署名과 核査察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盧大統領께서는 第46次 UN總會 演說을 통해서 北韓이 核武器開發을 포기하고 南北間의 信賴構築努力이 진전될 경우에는 韓半島 核問題에 대해서 南北間의 協議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는 第4次南北高位級會談에서 北韓側이 核武器開發을 포기토록 촉구하고 南北關係를 정상화하는 基本的인 合意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美國이 全世界的으로 배치되어 있는 戰術核武器를 철수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순위별로 該當國家와 協議를 거쳐 단계적으로 履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美國의 核雨傘保護는 核先制 攻擊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同盟國이 敵對勢力으로부터 核攻擊을 받을 경우 核武器로 방어할 것임을 對外的으로 알림으로써 戰爭抑止力役割을 하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金德圭議員님께서는 統一을 추진하는 우리 政府의 基本哲學은 무엇이며 獨逸式 吸收統一方案은 분명히 포기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래의 統一國家는 自由 人權 福祉가 보장되는 民主國家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統一의 가치는 個人의 自由와 人間의 尊嚴性尊重 그리고 福祉增進이라는 모든 人類가 추구하는 普遍的인 가치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7千萬 民族 構成員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건설하여 民族成員 모두의 참여와 機會均等이 이루어지고 主義 主張이 자유로이 표현되는 가운데 民族繁榮을 증진하고 民族의 恒久的인 安定을 보장하면서 世界 모든 나라들과 善隣友好關係를 이루어 世界의 평화와 人類의 福祉增進에 이바지하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統一方案도 급격한 併合이나 吸收로서가 아니라 民族自決에 바탕하여 自主的으로 武力에 의하지 않고 平和的으로 民族構成員 모두의 意思에 따라 民主的으로 合意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政府의 基本立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金德圭議員께서는 第4次南北高位級會談에서 常駐代表部 設置問題를 정식으로 提起할 용의와 이번 會談에서 合意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政府는 南北間의 相互 긴밀한 協의와 連絡을 통해서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平和와 統一의 基盤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南北間의 常駐連絡代表部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입장에 기초해서 1990年9月8日에 열렸던 第1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常駐連絡代表部 設置問題를 北韓에 정식으로 提起한 바 있으며 第4次南北高位級會談에서도 常駐連絡代表部 설치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이에 대한 北韓側의 肯定的인 호응을 추구할 것입니다. 政府는 이번 南北高位級會談에서는 南北關係의 基本的인 合意와 함께 不可侵宣言과 3通問題를 포괄하여 合意하는데 最善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金議員께서는 南北關係의 實質的인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南北 政黨과 社會團體 등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政府는 南北間 交流協力促進과 信賴回復을 위해서는 各界各層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活性化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法律에 정한 節次와 要件을 갖추는 한 交流協力 申請을 대부분 허용하고 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北韓이 政黨 社會團體를 망라한 이른바 政治協商會議을 내세워 우리의 國論分裂을 조장하고 對南攪亂顛覆戰略을 꾀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南北 政黨과 社會團體 間의 교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實質的인 南北關係 改善을 위해서는 南北의 責任있는 當局間 대화를 통해 基本的인 合意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보며 이를 위해 社會團體間의 교류는 既存對話의 순조로운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政府의 支援과 保障 아래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쌍방 政黨間 접촉도 國會會談의 테두리 안에서 推進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金顯煜議員 質問에 대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議員께서는 美國의 核兩傘保護를 전제로 政府가 非核政策을 일방적으로 천명하면서 北韓도 非核政策을 宣言토록 중용할 意向은 없는지 또 非核地帶化에 관해서도 물으신 바 있습니다.

政府는 核擴散禁止條約 當事國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義務로서 原子力을 平和的 目的에만 사용할 것과 核武器를 생산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公約을 이미 國際社會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今番 朴世大統領의 汎世界的 戰術核武器撤收宣言이 特定地域에의 核武器配置與否에 대한 NCND政策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駐韓美軍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韓美間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될 것이므로 굳이 非核政策을 宣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北韓이 核開發을 포기하면 韓半島內 核武器配置問題는 더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또한 그것 자체로서 非核政策을 수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편 國家間의 協約에 의한 非核地帶化問題는 金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非現實的인 政策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議員께서는 核問題關聯 韓美間에 事前協議가 있었는지 그리고 核武器撤收는 既定事實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韓美間 安保問題와 관련된 모든 懸案을 兩國은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核問題와 관련한 政策檢討는 지난 7月 韓美頂上會談과 그 後續措置의 하나로 8月

하와이에서 개최된 韓美高位安保政策協議會등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 UN總會 演說에서 盧大統領께서 北韓이 核査察을 수용하고 核開發을 포기하면 北韓과 核問題를 포함한 모든 軍事問題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韓美間의 事前 긴밀한 협의에 기초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美國은 全世界의으로 배치되어 있는 戰術核武器를 일시에 撤收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 地域別 또는 優先順位別로 該當國家와 협의를 거쳐 段階的으로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玉滿鎬議員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南北經濟協力問題 등은 統一을 앞당기는 肯定的인 측면도 있으나 北韓이 對南 革命路線을 고수할 경우에 대한 우리의 安保對應策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韓半島를 둘러싼 安保環境은 國際的 冷戰 終熄에도 불구하고 아직 南北對決構造가 지속되고 있으나 北韓은 汎世界的인 和解와 協力趨勢 그리고 南北 國力の 현격한 격차 經濟難의 심화 등으로 窮極的으로는 開放改革에 의한 實用主義路線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北韓의 變化를 비롯한 安保環境 變化를 예의 주시하면서 南·北韓이 서로의 發展과 繁榮을 돕는 民族共同體를 복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安保的인 측면에서 政府는 現實的으로 우려되고 있는 北韓의 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戰爭抑制力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편 南北의 平和共存 構造로서 變化可能性을 감안해서 段階的인 安保統制方案을 수립하는 등 未來指向的인 安保政策을 추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玉滿鎬議員께서는 向後 駐韓美軍의 役割變化에 따른 國防費 增加 必要性和 일부 國民들의 國防費 削減主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世界的인 脫冷戰과 軍縮 분위기 그리고

國家의 財政的 어려움과 國民福祉 需要增大 등을 감안한다면 國防費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主張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國際情勢가 비록 和解와 共存의 新秩序로 급속히 再論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局地紛爭의 可能性은 오히려 增大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韓半島 周邊情勢는 駐韓美軍의 減縮과 戰術核 撤收 蘇聯事態 이후 列強들의 勢力均衡의 再調整 日本의 軍事大國化 可能性 등으로 매우 流動的이며 특히 北韓은 變換없이 對南 革命戰略을 고수하고 있어 不安定性이 減少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의 一方的 國防費 縮小는 열세한 對北軍事力 隔差를 더욱 심화시켜 北韓으로 하여금 決定的으로 誤判을 초래케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南北關係에 決定的인 變化가 있을 때까지는 적정 수준의 國防費 確保는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駐韓美軍 減縮과 役割變更에 대비하여 駐韓美軍이 보유하고 있는 早期警報裝備 등 現代화된 尖端裝備를 確保하는 데에는 상당한 國防費 負擔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玉滿鎭議員께서는 北韓이 核武器를 보유하는 것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北韓은 93年頃에 核燃料 再處理施設을 完工 稼動하여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濃縮할 수 있을 것이므로 效果的인 核開發阻止對策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數年內에 核武器를 보유할 것으로 豫상을 하고 있습니다.

北韓이 核武裝을 할 경우 國際的인 核擴散禁止 메카니즘이 마비되어 UN 등 國際機構에 의한 紛爭豫防機能이 약화될 것이며 또한 北韓이 對南軍事挑發 야욕이 增加되어 地域內의 軍費競爭을 증폭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北韓의 核開發은 韓半島는 물론 東北亞 全體의 安全保障과 平和 維持를 위

해 필히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基本 입장이며 美國 日本 등 友邦國들도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北韓의 核開發 저지를 위하여는 먼저 北韓에 대하여 國際原子力機構의 核安全協定에 서명케 하고 國際核査察은 無條件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政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友邦國과 긴밀히 協力하면서 北韓에 대한 外交的인 압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盧武鉉議員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盧議員님께서는 먼저 第4次南北高位級會談에서 不可侵宣言과 南北交流를 一括妥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政府의 公式 입장인가 北韓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金德圭議員님 質問에 答辯드린 바 있습니다만 政府는 이번 南北高位級會談에서 타결점을 강구하기 위하여 南北關係改善과 不可侵 3通問題를 포괄해서 一括妥結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政府의 기본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北韓側도 會談의 實質的 進전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盧議員님께서 이 외에 盧大統領이 UN總會 연설에서 밝힌 平和協定の 체결 主張은 새로운 提案인가와 平和協定の 當事者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平和協定の 當事者에 대한 南·北韓間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代案을 가지고 있는가?

또 政府는 平和協定の 當事者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UN에 韓國을 休戰 當事者로 확인받는 것을 推進中이라는 報道가 있었는데 이것이 成事되면 北韓이 응할 것이냐 또 政府는 앞으로 南·北韓 美國을 平和協定 當事者로 하는 절충안을 提案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質問에 대해서는 상당히 專門的이고 具體的인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外務部長官으로 하여금 答辯드리겠습니다.

다음 崔在旭議員님께서는 本 質問에 앞서서 어저께 選舉日程에 관한 質問에 관해서

報道가 있는 데에 대해서 質問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崔在旭議員님께서 外交·安保·統一關係 質問에 앞서 어제 政治分野 質問과 答辯에서 다루었던 選舉日程問題에 관한 質問을 주셨습니다.

이 문체는 어제 一部 言論報道로 인해 오해가 대두된 것도 같고 盧武鉉議員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答辯과 說明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鄭順德議員님께서 政治分野 質問時에 현재의 政治日程上 選舉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임을 생각할 때 地方議會와 團體長 選舉를 통합해서 中間選舉의 性格을 띠 수 있도록 長期的 안목에서 政治日程을 再調整하는 것을 檢討해 볼 필요는 없는지 總理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質問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連續的인 選舉日程의 問題點에 관하여는 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長期的으로는 國家的 費用과 效率性을 고려하여 選舉日程의 調整問題를 신중히 再檢討해 볼 필요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答辯드린 바 있습니다. 地方議會選舉와 團體長選舉를 統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質問은 결코 來年 選舉日程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없고 答辯도 또한 來年の 狀況이 아닌 長期的인 問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選舉日程에 대해서는 어제 趙世衡議員님 張石和議員님께서도 質問을 주셨는데 저는 政府가 來년에 있을 일련의 選舉日程에 관해 아직 具體的인 方針을 결정한 바 없으나 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나아가서 現行 地方自治法에는 來年 6月30일까지 市·道知事 및 市長 郡守 自治區의 區廳長 選舉를 실시하도록 規定하고 있고 內務部 등 政府 關係部處에서는 關係法の 規定에 따라 自治團體長 選舉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答辯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答辯은 來年の 選舉日程을 再檢討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連續的인 選舉

에서 파생될 문제를 우려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그러한 狀況에 대한 再檢討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一部 言論이 저의 答辯과 관련하여 “來年 選舉日程 再檢討” 등의 제목아래 재가 來年 選舉日程을 再檢討할 用意를 표명한 것처럼 報道한 것은 재 答辯의 眞意와는 다르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으로 정해진 選舉關聯事項을 政府가 임의로 調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崔在旭議員님께서서는 本 質問에 들어가서 敵과 同志가 있는 理念戰爭과 敵과 同志가 없는 經濟戰爭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우리는 國際的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韓半島는 內部的으로 南·北韓間 軍事的 理念的 對立狀況에 있지만 外部的으로는 冷戰體制의 終熄에 따른 國際的 화해분위기는 서로 상반된 狀況하에 처해 있습니다. 冷戰體制下에서는 共產主義라는 理念을 경계로 敵과 同志가 구분되는 理念的 對決狀態가 지배적이었으나 蘇聯의 改革 開放政策과 함께 理念的 對決이 완화된 오늘에 있어서는 理念이라는 美名下에 實益을 희생하기 보다는 國家別 利益을 중심으로 하는 經濟戰爭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敵과 同志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理念的 對決보다는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經濟的 競爭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政府는 北韓의 開放을 꾸준히 유도하여 韓半島의 理念的 對決을 완화시키는 한편 國民 모두가 우리의 經濟力을 持續的으로 강화시켜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 그와 같은 方向에서 政策을 推進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崔在旭議員님께서서는 軍事力과 經濟力의 均衡을 회복하려는 美·蘇·日 등의 최근 노력이 우리에게 물고 을 波長과 그 對策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蘇聯은 共產主義 政治體制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붕괴에 따른 內部的 混亂으로 中·長期的으로는 政治·軍事問題에 대해 세력을 확장시킬 餘力이 없을 것입니다. 中國 또한 天安門事件 이후에 國內의 政治問題 해결과 4大 現代化政策 推進을 위한 部分

的 市場經濟體制의 수용 등 內部經濟問題 解決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美國도 기본적으로는 太平洋國家이나 필리핀基地 등 亞細亞地域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의 部分的 撤收 防衛費 負擔 및 戰術核武器 廢棄를 선언함으로써 美國의 軍事·政治力이 東北亞에서 蘇聯勢力의 退潮로 생길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확대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美國 蘇聯 中國의 政策은 결과적으로 亞細亞地域의 힘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고 이는 막강한 經濟力을 보유하고 있는 日本의 立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日本의 政治·軍事力 強化 可能性을 높이고 있으나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日本의 軍事大國化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韓半島周邊情勢와 理念的 對決의 弱化에 따른 政治·軍事力과 經濟力의 相互不可分性을 감안할 때 韓國은 기존의 韓·美安保協力關係를 유지 강화시키는 한편 美國 日本 등과 通商摩擦을 極小化하면서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다섯 議員님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마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尹衡 다음에는 副總理兼統一院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統一院長官 崔浩中 金顯煜議員 盧武鉉議員 그리고 崔在旭議員 세 議員께서 주신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顯煜議員님께서 주신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南北內部的 實相과 變化可能性과 관련하여서 政府의 統一意志 그리고 統一費用의 調達方法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金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統一은 韓半島의 南北은 물론 세계 도처에서 살고 있는 7千萬 우리 韓民族과 그 子孫들이 自由와 人權을 존중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北韓은 자기들의 體制가 외부로부터 輸入된 것도 모방된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獨自的으로 開發

한 것으로 必勝不敗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온 결과 오늘의 北韓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國際的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고립되어 가고 있고 國內的으로는 經濟難이 더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住民들의 불만과 動搖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北韓은 經濟成長率이 마이너스 3.7%를 기록함으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 經濟沈滯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食糧不足과 에너지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北韓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主體思想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느냐 하는 등의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일부 官僚들 중에도 實用主義路線을 주창하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北韓의 변화는 蘇聯이나 東歐諸國에서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歷史的인 추세로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蘇聯事態 이후 北韓과 蘇聯과의 經濟協力關係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對內外的 經濟與件이 北韓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統一費用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가 統一方式 時機 統合 단계에서의 發展 수준등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겠습니다. 統一費用은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결국 國民負擔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輕減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經濟力의 확충등 지속적인 國家發展이 요구되는 일방 統一되기 전까지의 南·北韓 經濟協力을 통해서 北韓地域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統一費用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인식 아래 多角的인 方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저께 答辯過程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今年부터 造成되기 시작한 南北協力基金은 앞으로 財源의 범위 내에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盧武鉉議員님께서 質問하신 內容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盧議員께서는 政府의 統一政策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質問을 주셨습니다마

는 質問書에 이 質問을 여섯 가지 범주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에 따라서 차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質問은 盧泰愚大統領께서 지난 9월 UN總會 演說次 뉴욕을 訪問하던 기간중에 가진 記者懇談會에서 統一方案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 政府의 公式立場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6共和國은 出帆 이후 今世紀內에 平和統一을 기필코 이룩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일념에서 民族自存과 統一繁榮을 國政指標로 세우고 認識과 發想의 대전환을 통해서 統一政策을 立案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政府는 統一에 대한 國民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광범한 輿論을 수렴하고 關係專門家は 물론 各界各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같은 바탕 위에서 지난 89年9월 韓民族공동체통일방안을 천명하게 되었고 이 방안을 우리의 統一方案으로 확정을 해서 統一政策推進의 기틀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韓民族공동체통일방안이 담고 있는 基本哲學은 무엇보다도 自由 人權 幸福이 보장되는 統一國家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며 民族構成員들이 民主的 절차와 방법으로 統一國家 建設過程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같은 統一國家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合理性 現實性, 그리고 合意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韓民族공동체통일방안은 이같은 基本哲學에 부합되는 한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도 一方的으로 이를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閉鎖的인 방안이 아니고 開放的인 統一方案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盧泰愚大統領께서 記者懇談會에서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우리의 韓民族공동체통일방안의 基本哲學에 입각하신 것이며 특히 實現可能性과 南·北韓間의 合意可能性에 기초해서 韓民族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틀 안에서 南北間의 具體的인 協議를 통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것은 가려내겠다는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받아 들일 것인지 또 무엇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인지는 南北間의 진지한 協議를 거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南·北韓間의 統一方案 協議를 위해서는 北韓이라는 體制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北韓이라는 體制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7千萬 韓民族이 自由 人權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統一方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主體思想과 金日成 一黨體制를 인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報道된 내용은 大統領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우리는 北韓의 體制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들과 統一方案協議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主體思想과 金日成 一黨體制를 全 韓半島로 확대시킬 목적에서 赤化統一政策을 추구하고 對南 顛覆戰略을 구사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응당 이에 대한 우리대로의 對應方案을 강구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政府로서는 어제 答辯에서 명백히 밝힌 대로 北韓이 對南赤化戰略을 포기하지 않는 한 國家保安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政府의 統一方案에 있어서는 盧泰愚大統領께서 가진 記者懇談會에서 밝히셨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韓民族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생각이 없고 어디까지나 北韓側과의 協議를 가져보고 檢討하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統一院은 統一政策에 관해서 國際情勢의 변화, 北韓의 動態 등에 따라 수시로 大統領께 여러 가지 報告와 對策方案을 建議하고 있습니다. 大統領의 地位 責務 行政權을 명시한 憲法 第66條는 大統領이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大統領 就任宣誓에도 平和統一 실현을 위한 大統領의 責務를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統一政策의 수렴 執行은 憲法이 大統領에게 부과한 權限이자 義務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의 盧大統領 말씀은 이에 따라서 大統領의 평소의 신념과 구상을 밝히신 것으로 압니다.

盧議員님께서 주신 두번째의 질문은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이 吸收統一方案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은 南과 北이 서로 共存共榮을 통해 한民族共同體를 회복·발전시켜 나감으로써 窮極의으로 1民族1國家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방안이 결코 吸收統一方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端的으로 우리의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統一中間段階로서의 南北聯合은 相互主義에 입각하고 있으며 南北間의 인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側과 1對1의 관계에서 南北聯合機構를 구성할 것을 제외해 놓음으로써 합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에서는 自主·平和·民主의 統一 3原則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民主는 통일과정에서도 民主的 節次를 밟아야 하지만 통일된 나라의 모습 역시 自由民主體制여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獨逸의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준 충격은 실로 큰 것입니다. 2年前까지만 해도 많은 專門家들은 獨逸의 통일보다 우리의 통일이 오히려 쉽다고 말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國際情勢의 변화와 獨逸國民들의 통일열망은 今世紀의 가장 어려운 과제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獨逸統一의 사례는 잘된 면은 물론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角의인 분석과 검토가 政府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盧議員님께서 지적하신 大統領秘書室 外交安保研究院 統一院 關係官 등이 여러가지의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이러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統一政策은 南北이 共存共榮하면서 平和的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며 盧泰愚大統領께서 월스트리트 저널등 記者會見 등에서 말씀하신 입장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獨逸統一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

어야 합니다. 獨逸統一 1週年을 평가하는 言論들의 지적가운데 經濟統合이 政治·軍事의 境界線을 허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獨逸統一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과 獨逸式 統一을 추구하는 것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獨逸統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吸收統一은 西獨이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結果的으로 보면 吸收統一이 된 면이 있고 또 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合流統一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번째로 盧議員님께서 앞으로 있을 10月22日 南北高位級會談에서 不可侵宣言과 南北交流 問題의 一括妥結을 제의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國務總理께서 答辯이 계셨습니다.

넷째로 盧議員님께서 政府가 마련중인 統一對備策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質問을 주셨습니다.

政府는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 천명이후 이의 실현을 위한 多角의인 後續措置를 강구해 오고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平和統一의 목표는 결코 어느 한 部署나 한 個人의 일이 아니며 모든 政府部處의 일인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통일은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政治·軍事·經濟 등 각 분야에서 통일에 대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며 이같은 準備作業의 일환으로 政府 各部處가 統一對備策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0月中 一次試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완하여 政府次元에서의 綜合對備策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같은 統一對備策은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에 입각해서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이후의 제반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며 앞으로 北韓社會의 변화가능성까지도 고려에 넣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盧議員님께서 政府가 西獨의 統一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質問을 주셨습니다.

앞서 質問에 대한 答辯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獨逸統一過程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참으로 많습니다. 政府는 이미 駐獨逸駐在官 등을 통해 獨逸統一過程과 통합이후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統合狀況을 현장에서 면밀히 추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內의 많은 專門家들로부터도 獨逸統合에 대한 專門的 諮問을 받고 있습니다. 獨逸統一에서 얻은 많은 교훈중에 이 자리에서 특기하고자 하는 것은 經濟的 統合이 政治·軍事의 통합 못지않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政府는 獨逸의 경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南北間의 經濟交流과 협력에 보다 역점을 둔 政策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盧議員님께서 西獨에 우리나라의 國家保安法과 같은 法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다면 東獨과의 관계에서 그 法으로 처벌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質問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獨逸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에는 內外的 상황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東獨이 西獨을 赤化統一하겠다고 공언했거나 西獨을 전복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이 탄 비행기를 격추하고 國家元首를 살해하려는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同族虐殺이나 테러행위를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統獨以前 西獨은 基本法 第18條에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공격하기 위해 基本權을 남용하는 자는 基本權을 상실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당시 그 누구도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西獨의 경우에 비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法廢止를 거론하거나 容共行爲를 한 犯罪者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盧議員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國家保安法은 大韓民國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규제함으로써 國家의 안전을 도모하고 國民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北韓이 對南赤化統一路線을 포기하고 일체의 對南挑發과 顛覆企圖를 중단한다면 國家保安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反國家團體가 스스로 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盧議員님께서 北韓의 TV放送 開放 問題에 대한 質問을 주셨습니다.

政府는 南·北韓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신문 라디오 TV 그리고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南北高位級會談을 통해 이를 협의할 것을 北韓側에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政府는 현재 北韓에서 발간되는 신문 책자 그리고 TV 프로그램등 영상자료의 단계적 개방을 一方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政府는 앞으로도 一般國民들이 北韓實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北韓資料의 개방확대와 함께 放送交流에 대한 南·北韓의 합의도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盧議員님께서 政府내에 統一業務를 누가 주도하는지 質問하셨습니다.

議員 여러분들의 성원 그리고 國民들의 統一聲援에 힘입어서 저희 統一院이 副總理 部署로 승격된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는 統一問題가 비단 統一院 한 部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만큼 政府차원에서 統一業務와 관련하여 有關部處를 조정하는 制度가 必要하다는 國民的 共感帶에서 출발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統一院은 副總理 部署로 승격한 이후 統一關係長官會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制度的 기틀을 마련해 왔으며 이를 통해 統一政策 南北對話 南北交流에 대한 諸般業務를 총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南北對話事務에 있어서도 統一院 所屬機關으로 南北對話事務局 事務를 보다 活性化해 나가고 있으며 南北間의 對話와 관련해서 代表團의 平素 活動은 물론 會談運營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南北對話時 安企部 쪽지 운운하는 特定報道에 대한 질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對話事務局은 安企部所屬으로 있었습니다마

는 지난 80년에 統一院으로 이관된 이래 統一院長官의 지휘하에서 그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統一院長官으로 부임한 이래 南北對話事務局을 포함한 統一院의 各 室局間의 人事交流가 여러차례 진행되었으며 지금 南北對話事務局 職員의 90% 이상이 새로 임용되었거나 교체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盧議員님께서서는 第6共和國 出帆이래 천명된 7·7宣言 등 각종 對北政策을 統一院이 立案·建議한 것이냐는 質問을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政府의 統一政策業務는 統一院이 맡고 있고 이같은 統一政策의 立案過程에서 國民들의 여론수렴은 물론 政府內의 有關部處의 구상과 건의도 이를 받아들여서 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政府가 천명한 統一政策은 많은 부분에서 民間專門家들의 아이디어까지도 수용하고 있으며 統一院이 추가 되어서 내외의 諸般 情勢 등을 감안한 각종 政策代案을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盧議員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政府 여러 部處間에 統一政策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비록 發想過程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政府의 公式政策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政策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安企部도 情報蒐集機能은 갖추고 있고 國家安全保障을 관장하는 部署로서 統一業務에 관여하여 기여하는바 큼니다.

盧議員님께서서는 超黨外交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統一外交를 包含해서 外交方向이나 政策에 關해서 國內에서는 各 政黨間에 활발한 協議와 討論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方向이나 政策이 定해진 후에는 이에 따라 對外的으로는 步調를 맞추어 推進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을 樹立하는 過程에서 이런 節次를 밟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國會를 통해서 各 政黨과 더욱 긴밀히 協調하도록 힘쓰겠습니다. 外國의 例도 물으셨습니다마는 外國도 대체로 이와같은 方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具體적인 規範적인 事例를 把

握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統一政策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여론 수렴의 重要性을 강조하셨습니다.

政府로서도 盧議員 의견과 같은 입장에 있어서 이를 인식해서 여러가지 努力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國民이 선출해서 國民을 代表하는 民意의 殿堂인 國會가 여론을 代表하는 重要한 機關인 것으로서 저희들은 銘心하고 있습니다. 外務統一委員會는 물론 특별히 구성된 統一特別委員會와도 긴밀히 協調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 學界 言論界 專門家들로 구성된 政策諮問委員會를 統一院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家 元老로 構成된 統一顧問會議 등 여러가지 機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관을 더욱 활성화해서 다각적인 여론 수렴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崔在旭議員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서는 오늘날 脫冷戰時代에는 韓半島 統一을 바라보는 各國의 視角에 미묘한 變化가 있는 것으로 推定되는데 世界秩序의 再編이 우리의 統一問題에 미치는 影響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最近 國際情勢는 지난 半世紀동안 對決과 反目으로 點綴된 冷戰體制가 瓦解되고 和解와 協力の 새 秩序로 代替되고 있음을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變化는 東·西冷戰의 產物로서는 分斷된 韓半島의 統一에 有利한 길을 造成해 주고 있으며 蘇聯 中國 등 周邊國家들도 韓半島에 安定과 平和가 定着되기를 希望하고 있습니다.

지난 9月17日 南北韓 UN加入에 대해 보여준 周邊國家들의 全幅적인 支持는 이러한 世界史的 흐름을 잘 말하여 주는 具體적인 事例입니다.

물론 轉換期的인 國際情勢가 지니고 있는 불안定性和 韓半島 狀況의 特殊性으로 인한 潛在적인 危害要素는 常存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마는 世界 모든 나라가 理念보다 經濟적인 實利를 追求하고 社會福祉를 指向하여 和解하고 協力하는 時代적인 狀況에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統一을 反對할 수

는 없다고 믿습니다.

政府는 이러한 情勢가 지니고 있는 潛在的인 危害要素를 警戒하면서 國際情勢의 肯定的인 變化를 活用해서 今世紀內에 반드시 統一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히 努力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崔議員께서는 北韓이 宣傳하는 두 個의 朝鮮論에 惡用될지도 모를 先 平和定着段階를 우리가 固守하지 말고 하나의 祖國이라는 우리의 意志를 闡明할 意思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北韓은 말로는 하나의 朝鮮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1民族 1國家 2制度 2政府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은 두 個의 朝鮮을 追求하고 있으며 우리 側은 先 平和定着이라는 中間過程 등을 重視함으로써 두 個 祖國論者로 誤解를 받을 수 있다는 崔議員님의 指摘에 同感을 表示합니다.

北韓이 宣傳하는 高麗聯邦制統一方案 自體가 서로 다른 2個의 體制를 認定하자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두 個 朝鮮을 指向하는 것이고 특히 東歐變化 以後 北韓은 吸收統合 反對를 내세워서 地方政府가 더 많은 權限을 갖는 形態의 聯邦制를 強調하고 있는 바 이것도 北韓이 內心으로 두 個 朝鮮을 追求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先 平和定着立場은 平和統一로 가는 中間段階로서 南北間의 累積된 不信과 對決을 解消하고 交流協力을 통해 相互 信賴를 回復하자는 意味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祖國을 천명하자는 議員님의 提案과 관련해서 우리의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의 最終目標가 하나된 統一祖國 즉 統一民主共和國로 되어 있는 바 새삼 하나의 祖國을 선언하지 않아도 이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에 그러한 基本방향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니다.

다음으로 崔議員님께서는 南北의 當局間 統一論議 過程에서 北韓當局과 住民間의 利害相衝이 예견되는 事案에 대해서는 北韓住民의 統一意志가 犧牲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할 必要性이 있는데 이에 대한 見解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政府는 民族構成員 전체가 統一의 主體가 되며 統一의 受惠者가 되어야 한다는 基本的인 認識에 따라서 南北韓間의 共同體 關係를 回復發展시켜서 單一民族國家를 建設하는 것을 統一의 本質的인 內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北韓은 극도로 閉鎖되고 統制된 社會로서 北韓住民의 自由로운 意思表示가 不可能한 狀況下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北韓이 開放과 改革이라는 國際的인 潮流에 따라서 스스로 改革과 開放의 길로 나올 것을 꾸준히 促求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努力을 계속 할 것입니다.

다만 現實的으로 南北韓間에 統一問題에 대한 論議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對話의 相對로서 北韓地域을 代表하는 當局이 존재하고 있다는 現實認定의 바탕위에서 南北間의 諸般 問題가 책임있는 當局間의 合意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政府의 立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崔議員님께서는 南北民間往來가 부진한 이유는 政府에 責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北韓側의 態度에 問題가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政府는 南北間의 信賴를 구축하고 民族同質性을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南北韓民間間의 往來와 接觸이 擴大되고 活性化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立場에서 多角的인 交流協力을 實現하기 위한 努力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立場에서 政府는 우리 國民들이 北韓住民과의 接觸을 申請하거나 北韓訪問을 申請해 올 경우 適法한 節次와 要件에 맞는 한 이를 全的으로 受容하고 그 實現을 위해서 적극 支援하는 前向的인 방향에서 處理해 왔습니다.

그러나 崔議員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의 南北間 人的 往來는 當局間 會談과 蹴球評價戰 등을 위한 往來외에 民間의 個別的인 往來實績은 거의 없고 第3國에서의 接觸이나 書信連絡의 경우도 成事比率이 政府가 承認한 件數의 불과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民間級의 南北往來가 저조한 根本的인 理由는 北韓側의 南北間 交流에 대한

否定的인 態度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北韓은 南北住民의 자유로운 交流가 實現될 경우 北韓社會의 開放이 不可避하게 되고 더 나아가 北韓體制의 유지에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라는 被害意識에서 南北間의 交流와 協力을 回避 또는 遲延시키려 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 內部的 混亂과 分裂을 助長하기 위한 政治工作的인 次元에서 利用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選別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政府가 承認한 800餘件 北韓住民 接觸中 실제로 北韓이 肯定的인 呼應을 보내온 케이스는 거의 전무하며 政府가 不許하거나 全民聯 全教組 등 不法團體가 임의로 제의한 汎民族大會 등 政治目的의 對北 交流에 극히 制限的으로 응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北韓의 스키이트選手였던 한필화의 오빠인 한필성씨의 경우 北韓이 招請狀을 보내놓고도 우리 政府가 그의 北韓訪問을 許可하자 身邊安全保障覺書傳達를 拒否함으로써 사실상 그의 北韓訪問을 가로 막았으며 김현영 장논부씨 등 자기 北韓家族을 만나고자 하는 경우에도 訪北招請狀을 보내놓고도 비자발급을 否定하는 등 매우 不誠實하고 拒否的인 態度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政府가 周旋한 바 있는 서울地域 大學生記者聯合의 訪北取材와 建國大學校 國文科의 北韓地域 學術踏査를 위한 板門店 接觸에서도 北韓側은 당초의 순수한 訪北取材나 學術踏査와는 달리 밀입북자인 우리 大學生의 板門店 歸還取材를 前提條件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全大協 活動의 일환으로 學術踏査를 實施해야 한다는 등 政治的인 目的으로 利用하려 함으로써 이들의 北韓訪問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民間次元의 南北往來가 부진한 것은 우리 政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北韓側의 南北間 交流에 대한 否定的인 態度에 전적으로 그 原因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崔議員님께서 盧泰愚 大統領께서 UN演說에서 밝힌 韓半島 平和定着과 統一 促進을 위한 3個項의 具體的인 實踐方案을 물으셨습니다.

盧大統領께서는 9月24日 UN演說을 통해서

休戰體制的 平和團體로의 轉換 南北間 軍事的 信賴構築과 實質的인 軍備減縮 南北間 사람과 物資 情報의 자유로운 交流 등 세 가지 方案을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과 統一의 促進을 위해 實踐해 나아갈 것을 提案 하셨습니다.

大統領께서 提示하신 세가지 方案은 統一 推進에 관한 우리의 3大 立場으로 韓半島 平和定着과 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해서 조속히 實現되어야 할 原則的이며 基本的인 課題입니다.

이제 南·北韓은 UN加入을 契機로 相互 實體認定의 바탕위에서 政治·軍事·交流協力 問題를 포함한 모든 問題를 對話와 妥協을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實質的인 關係를 增進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政府는 곧 開催될 第4次南北高位 級會談에서 平和定着과 統一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3個項의 實踐方案을 포함하여 南·北韓間的 모든 懸案問題에 대해서 實質的인 合意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에서 北韓側과 積極的으로 協議해 나아갈 方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趙尹衡 다음에는 外務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務部長官 李相玉 外務部長官입니다.

먼저 金德圭議員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金議員님께서 質問하시는 가운데 우리 北方外交가 國內의 政治的인 목적을 위해서 政略的인 次元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다소 否定的인 시각을 피력하셨습니다. 마는 우리 政府가 추진해 온 北方外交는 蘇聯과 東歐羅巴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에 대응해서 政府가 기회를 포착해서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또한 과단성있는 政策決斷을 통해서 蘇聯과 東歐羅巴의 모든 나라와의 國交正常化를 가져왔고 中國과도 關係를 개선하는 등 그 과정을 통해서 UN에 南·北韓이 同時加入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연결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外交의 본보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北方外交는 國際社會에서도 그러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金議

員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金議員님께서 이 中國大陸의 政治·經濟的 變化의 전망과 우리의 對中國政策의 기본방향 또한 97年 香港이 中國에 반환된 이후의 전망 그 밖에 中國과 臺灣의 統一問題 등에 대해서 저에게 質問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中國은 70年代 中盤 이후부터 經濟改革을 통해서 지속적인 經濟發展과 現代化計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天安門事態와 같은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이 經濟改革面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中國이 단기적으로 東歐羅巴에서 있었던 바와 같은 그런 급격한 어떤 政治的 變化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中·長期的으로는 中國도 지속적인 經濟發展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政治改革의 문제와 權力承繼問題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런 政治的 課題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政府의 對中國政策의 基本方向은 그 동안에 兩國간에 축적된 實質協力關係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國交를 正常化하는 그런 단계까지 兩國關係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政府로서는 韓·中 兩國간의 國交正常화가 韓·中 兩國간의 相互利益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亞地域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月2日 제가 UN總會 참석중에 中國의 外交部長과 韓·中 兩國간에 최초의 外務長官會談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석상에서도 韓·中 兩國간에 최근에 실질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에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가 있었습니다.

香港은 잘 아시다시피 83년에 英國과 中國간에 合意된 바에 따라서 체결된 協定에 따라서 97年7月1日자로 香港에 대한 主權은 中國으로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中國은 그 날로부터 50年間은 中國의 特別行政區로서 現行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外交와 國防問題 등 일부

의 권한을 中央政府에... 中國政府에 귀속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香港은 97年이후에 50年間에도 獨立關稅地域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어서 GATT의..... 예를 들면 貿易 關稅의 一般協定에... GATT의 最惠國으로서 또 이번엔 서울에서 개최되는 APEC 關係會議에서 APEC에도 香港이 별개의 會員으로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地位는 特別行政區로서의 地位를 갖는 동안에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中國과 臺灣 統一問題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中國은 하나의 中國政策에 기초해서 共產黨과 國民黨間에 政治協商을 통해서 1國2體制로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臺灣의 中華民國은 共產黨과의 통일 협상을 反對를 하고 기존의 三不政策 즉 不接觸 不協商 不妥協의 政策은 견지를 하되 人的 物的 交流를 制限的으로 허용하고 우선 相互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臺灣에 대한 中國의 무력행사 포기와 國際的인 臺灣 고립화정책의 포기 그리고 中國大陸의 政治 經濟制度의 변화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中國과 臺灣과의 統一問題가 平和的으로 해결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金議員님께서 韓·中 修交問題와 관련하여 中國에 대한 經協 규모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政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마는 저희 政府가 北方 社會主義國家들과 修交時에 經協과 修交는 직접 연계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中國과도 그러한 經協問題가 제기된 일도 없고 저희 政府에서는 檢討한 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德圭議員님과 또 나중에 金顯煜議員님께서 金日成의 지금 現在 內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金日成의 中國訪問 結果와 특히 北韓의 核査察에 대한 中國의 입장 그리고 韓·中 修交와 韓半島 情勢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質問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北韓의 金日成은 지난 10月4일부터 지금 中國을 訪問中에 있습니다.

아직은 言論發表와 또 外見上의 儀典行事를 통해서 알려진 사항 이외에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번 金日成의 訪中중에 中國 指導層과 논의된 사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中國指導層이 北韓에 대해서 北韓의 현재 어려운 經濟的인 곤경을 피하기 위해서도 점진적인 經濟改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사는 여러가지로 받고 있고 또한 中國이 앞으로 韓半島問題와 관련해서는 韓半島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韓半島의 평화와 안정이 中國의 이익에도 부합이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韓·中修交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조속한 時日內에 韓·中 兩國間의 관계가 正常化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政府가 어떤 時限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兩國間에 實質 協力關係가 더욱 강화되어 감에 따라서 修交는 멀지 않아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議員님께서서는 先進國들의 技術保護主義에 대한 기본입장과 우리 政府의 대응방안을 質問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對外經濟關係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를 제기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政府는 지금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國際技術 秩序속에서 우리나라가 科學技術先進國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國際科技動向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金議員님께서서는 OECD加入에 따른得失을 質問하셨습니다.

OECD加入에 따르는 득으로는 저희들이

先進國 대열에 동참을 함으로 해서 世界經濟運用에 우리의 입장을 보다 더 폭넓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또한 先進國 대열에 동참함으로 해서 韓國의 國際的인 信任度를 提高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한 國內 經濟政策 및 制度의 先進化와 效率化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점도 있고 또한 兩者의인 經濟通商摩擦에 多者的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利點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失이라는 면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補完을 요한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본이동과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의 義務負擔을 저희가 지게 된다는가 國內 經濟政策의 일관성 유지 및 對外公開의 또 투명성을 유지하는 이런 의무를 지게 된다는가 또한 開途國에서 완전히 졸업함으로 해서 開途國의 지위를 향유하는 동안에 가졌던 모든 利點이나 特惠를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가지 부담을 안게 되겠습니다.

우리 經濟는 지금 90年度에 GNP 기준으로 世界 第15位로서 이와 같은 우리 經濟力에 상응하는 國際的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OECD에도 궁극적으로는 가입하는 것이 우리 經濟의 先進化와 지속적인 發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앞으로 對內 自由化의 진전과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보아서 저희들이 政府가 결정하고자하며 대체로 90年度 中盤以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며 성급하게 OECD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金議員님께서서는 EC의 통합에 대응하는 우리 政府의 對應策과 또 우리의 對 EC外交方向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EC는 아시다시피 92년에 單一市場을 형성하게 되면 그 거대한 世界에서 가장 큰 單一市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뿐 아니라 歐羅巴 自由貿易聯合 즉 歐羅巴 經濟圈을 형성하기 위한 이런 교섭도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리라고 봅니다.

政府에서는 EC의 經濟統合이 가져오는 여러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의 EC와의 實質的인 협력관계와 교역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金議員님께서서는 최근에 國際情勢의 변화와 관련해서 팍스·아메리카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지와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對美外交의 기본전략에 관련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國際情勢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冷戰의 종식을 가져오고 美·蘇間에 兩國體制가 와해되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부시大統領이 UN總會 演說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美國이 추구하는 것은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팍스·아메리카나는 결코 아니고 부시大統領이 말한 것처럼 팍스·유니버설이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蘇聯의 지위 약화로 말미암아서 美國의 國際政治 軍事上的地位가 상대적으로 크게 강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또한 國際經濟 側面에서 볼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多極化의 현상이 진행되어 왔고 해서 이른바 팍스·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아니고 美國의 역할이 강화되고 증대되는 그런 새로운 國際秩序가 형성되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國際秩序에 대응해서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또한 우리의 實利面에서 安保나 經濟上的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對美外交를 美國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우리 外交의 基軸으로 삼고 해서 美國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金德圭議員님은 日本의 軍事大國化에 대한 質問을 주셨고 이에대한 우리 政府의 대책에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金顯煜議員님께서도 유사한 質問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答辯을 해 올리겠습니다.

日本이 지금 막강한 經濟力과 또 防衛豫算의 규모 또 무기개발과 관련된 産業技術의 發展段階 등을 고려할 적에 日本의 잠재적인 軍事能力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또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日本은 日本 스스로가 밝히다시피 軍事大國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日本은 자기들의 經濟力과 國際的位上에 상응하는 政治的 外交的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日本 議會內에서 그동안에 PKO法案도 審議되고 이 法案은 다음 會期로 넘겨졌습니다마는 저희들 政府에서도 基本的으로 日本이 國際的 위상이나 經濟力에 상응하는 역할 특히 國際平和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日本이 非軍事的인 方法으로 기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日本의 軍事的인 역할에 대해서는 특히 日本의 自衛隊의 해외파견을 가져오는 그러한 어떠한 軍事的 역할에 대해서는 韓國을 비롯해서 과거에 日本 軍國主義의 침략에 희생이 되었던 亞細亞 인접국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日本政府가 이러한 隣接國家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PKO法案등 이런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촉구해 왔고 또 앞으로 그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日本에 표명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議員님께서서는 日本이 우리의 統一支援勢力이 될지 아니면 統一反對勢力이 될지에 관한 우리 政府의 견해와 對策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일부 學者 간에 또 일부에서 우리 統一問題에 대한 日本의 시각에 대해서 日本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日本도 基本的으로 韓半島의 平和와 그리고 南北韓 간의 平和的인 統一이 日本을 포함한 亞細亞太平洋 全體 地域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大統領께서도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마는 우리의 自主力量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 民族 스스로가 統一의 길을 걸어간다면 南北韓間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統一을 성취해 나간다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그 統一은 막지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統一은 결국은 받아들여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金議員님께서서는 日本의 北韓에 대한 戰後 45年 補償要求問題와 관련한 政府의 입장 그리고 太平洋戰爭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희생되었던 우리 國民들의 戰後清算問題와 관련한 韓日간의 論議內容을 質問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戰後 45年 간의 戰後補償要求問題는 北韓이 對日修交交渉過程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北韓의 주장은 韓半島의 분단이 日本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韓國戰爭時에도 日本이 미군을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北韓에게 입혔다 하는 그런 논지를 가지고 日本이 戰後 45年間に 北韓에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補償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北韓의 주장은 日本이 修交交渉過程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日本과 北韓 간의 修交交渉은 韓日간의 國交正常化 그 과정과 그 형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또한 韓日간의 우호관계나 韓半島의 평화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기여하는 방향으로 日·北韓간의 修交交渉이 진행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太平洋戰爭 강제동원 희생자문제에 대해서는 韓日간의 불행했던 過去史에 기인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政府로서도 이들 문제를 원만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兩國關係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그런 기본인식을 가지고 日本과의 여러가지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過去史에 기인하는 對日被害補償問題는 1965년에 체결된 韓日간의 國交正常化 一環으로 해결된 韓日간의 財産및 請求權問題 解決과 經濟協力에 관한 協定에 의해서 兩國政府간의 法的으로는 이미 일단락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하나의 外交的인 문제로서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過去史의 清算 이런 측면에서 政府로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金議員님께서서는 豆滿江流域開發事業에 대해 우리 政府가 구상하고 있는 참여정도와 단 日本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

여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우리 政府의 견해를 質問하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UNDP 유엔의 開發計劃의 東北亞地域協力事業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豆滿江流域開發事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가지 開發構想의 經濟的 妥當性調查라든가 또 北韓 中國 蘇聯 등 豆滿江沿岸國과 또 韓國 日本 몽골 등 關係國들의 입장조정 그리고 또 所要財源 調達問題 등 여러가지 앞으로 검토되고 또 구체적으로 다져 나가야 할 문제가 많고 아직은 이 구상이 妥當性調查와 檢討段階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주 10月16일부터 18일까지 平壤에서 그간 UNDP가 실시한 開發妥當性의 豫備調査報告 檢討와 아울러 向後的 推進方向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해서 UNDP 主管下에 關係國會議가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代表團을 보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金德圭議員님께서서는 僑民廳 新設問題에 대한 政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海外僑民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僑民廳 新設問題는 이제 오래전부터 政府內에서도 여러차례 검토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89년에 行政改革委員會가 僑民行政의 強化方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僑民廳 新設問題도 그 일환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때 行政改革委員會의 결론도 僑民行政強化를 위한 機構와 人員補強 必要性은 일응 인정하면서도 僑民關聯 行政業務는 專門性과 分野別의 綜合的인 연계성의 조화를 위해서 政府 各部處間과 맡고 있는 이런 業務遂行의 效率化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단계에서 僑民廳의 新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外國에서도 僑民廳을 新設하고 있는 機構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政改革委員會의 결론에 따라서 議員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外務部에서는 領事 僑民局을 補強을 했습니다.

그래서 在外國民課를 在外國民 1課 2課로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僑民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部署의 強化라든가 業務效率化를 통해

서 僑民支援行政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金顯煜議員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核問題에 관해서는 아까 總理께서 이미 포괄적으로 政府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마는 金議員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質問이 北韓이 核武器開發을 계속할 경우 對應方案은 무엇이며 外交的인 노력은 보다 강화할 대책은 세워져 있느냐 하는 質問을 주셨습니다.

저희 政府에서는 北韓이 核非擴散條約의 締約當事國으로서 條約의 義務인 IAEA 즉 國際原子力機構와의 核安全協定을 지체없이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北韓이 가지고 있는 모든 核物質과 核施設에 대한 國際查察을 수용함으로써 해서 北韓의 核武器開發可能性에 대해서 國際社會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北韓의 태도를 계속 주시해 가면서 필요한 外交的인 對應策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金委員께서는 北韓이 核非擴散條約에서 탈퇴를 하면 北韓에 대하여 더이상 核查察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北韓의 核非擴散條約 脫退可能性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國際的인 核非擴散制度를 강화하자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고 그동안 核非擴散條約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佛蘭西와 中國도 核非擴散條約에 가입하겠다는 政策的인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北韓이 이 條約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스스로 國際社會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北韓이 더욱 더 심각한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北韓이 그와같은 무모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런 무모한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顯煜議員님께서 우르콰이라운드協商 특히 우르콰이라운드의 農產物協商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質問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르콰이라운드協商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昨年 年末에 끝날 協商이었습니다마는

農產物 또 知的所有權 서비스분야등 주요한 協商分野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協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GATT 總務事務總長은 이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11月末까지는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은 主要協商分野에 일괄적인 어떤 妥協案을 11月初까지는 마련하고자 이렇게 協商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農產物協商分野만 하더라도 아직은 農產物協商이 停頓狀態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美國과 EC間에 합의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農產物協商의 전망은 현단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農產物協商의 현재 現地에서의 협상분위기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農產物協商에 있어서 어떤 特定農產物品目에 대한 예외나 특별히 취급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러나 저희 政府로서는 우리 農業이 안고 있는 構造的인 어려움과 우리 農民들을 權益保護를 위해서 우리 農業의 특수성을 협상에 반영시켜서 특히 쌀만은 어떠한 예외적인 취급과 특별한 經過措置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外務部에서도 農林水産部 經濟企劃院 商工部등 이 우르콰이라운드協商에 관련되는 모든 部處와 힘을 합해서 이 協商에서 우리 國家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柳寅鶴議員 議席에서-日本에서 關稅를 받아들인다고 新聞에 났는데 日本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現地에서 韓·日間에 또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輸入國間에 자주 만나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그런 通報를 공식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金議員님께서 우리 駐제네바大使의 지난번 公館長 일시 귀국시에 協商에 대한 現地 분위기 설명 가운데에서 조금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제네바大使가 現地에서 本國政府에서 파견된 각 部處의 대표들과 힘을 합해서 協商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盧武鉉議員님이 總理께 드린 質問 중에 아까 總理께서 저에게 答辯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盧議員님께서 大統領께서 지난 9月 24日 UN總會 基調演說에서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平和的인 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3가지의 基本原則的인 입장을 밝히시는 가운데 休戰協定을 恒久的인 平和體制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當事者問題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盧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休戰協定의 當事者問題에 대해서는 北韓이 그 동안에 韓國은 休戰協定의 署名者가 아니라는 이유로 北韓과 美國間에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休戰協定의 署名者와 當事者는 다른 개념입니다. 비록 우리는 休戰協定에 직접 署名하지 않았습시다마는 그 당시에 休戰協定은 戰爭의 일시적인 종식을 위해서 軍司令官間에 署名된 그런 잠정적인 協定입니다. 그 協定은 軍司令官들이 協定을 했습니다. 당시에 UN軍司令官이 UN參戰國 16個國과 또 大韓民國을 대표해서 그것을 署名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잘 아시다시피 1954년에 제네바에서 韓國政治會議가 개최되었을 때도 韓國은 다른 UN參戰 16個國과 함께 제네바會議에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法的인 문제를 떠나서 實質的으로 이 韓國問題에 관한 直接當事者가 南·北韓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北韓이 署名問題를 이유로 해서 美國과의 直接協商을 요구를 하고 또 심지어 이 3者會談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北韓의 對南戰略의 일환으로써 특히 越南型의 어떤 협상모델을 한국문제에 도입하기 위한 그런 책동의 일환으로써 이 3者會談을 제의한 것입니다. 南·北韓間의 休戰協定의 對替問題를 포함한 모든 韓半島의 平和에 관한 南·北韓間의 統一問題에 관한 核心的인 사항은 實質的인 直接當事者인 南·北韓間의 協商과 합의를 통해서만이 해결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서 平和協定의 當事者問題解決을 위해서 UN總會나 安保理事會에서 韓國을 當事者로 확인받는 方案을 政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것은 잘못된 報道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즉시 우리 外務部代辯人이 이것을 부인하는 論評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앞으로 休戰協定을 恒久的인 平和協定으로 對替하는 그 協商에 있어서 實質的인 가장 直接當事者로서의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지위는 새삼스럽게 UN을 통하거나 第3者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로 語不成說입니다. 政府는 지난번에 大統領께서는 UN總會演說 가운데에서도 아까 總理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北韓이 核査察을 수용하고 核武器開發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南·北韓間에 軍事的인 신뢰조치가 이행이 된다면 韓半島의 核問題를 포함한 軍事的인 문제까지도 北韓과 직접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도 南·北韓間의 直接協商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崔在旭議員님께서 日本의 對北韓 修交交渉과 관련해서 核査察問題만 해결되면 日·北韓修交가 가속화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현재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對北韓 經協問題에 관한 우려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日·北韓간 修交交渉에서 큰 障礙要因의 하나가 核問題입니다. 北韓의 條約上的 義務인 核安全協定締結遲延이 日·北韓간의 修交交渉에서 큰 障礙要因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日·北韓간에는 이 밖에도 풀어나가야 할 몇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大統領께서는 日·北韓 修交交渉과 관련해서 日本側에 5個項의 充足要件이라할까 하는 것은 提示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日本이 우리 大統領께서 말씀하시는 이 5個項을 유념하고 協商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 核査察問題뿐만 아니라 南·北韓 간의 對話와 交流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진전이라든가 그 밖에 더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核査察問題가 해결되면 日·北韓 修交交渉을 촉진은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日·北韓간에는 더 풀어나가야 할 課題가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日本の 對北韓經協問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5個項속에서 修交이전에 對北韓補償이나 經協提供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또 특히 北韓의 軍事力增強에 연계되는 그런 經協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政府로서는 日本이 北韓과의 修交交渉過程에 있어서 우리 政府의 이러한 견해와 입장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는 가운데 交渉을 진행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 政府에서는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네 분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데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尹衡 끝으로 國務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李鍾九 國防部長官입니다.

質問順序에 따라 먼저 金德圭議員께서 質問하신 것부터 答辯드리겠습니다.

金議員께서는 駐韓美軍 核의 存在與否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金顯煜議員께서도 美國의 對韓 核雨傘政策과 美國 核撤收로 인한 우리의 核抑制力弱화與否 그리고 韓·美 간 協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나 하는 내용을 質問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駐韓美軍 核의 存在與否에 대한 美國의 NCND政策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安保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번 부시 美國大統領의 새로운 核政策發表로 美國의 NCND政策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北韓의 위협이 상존하고 核開發疑惑이 불식되지 않는 限 美國의 NCND政策은 對北

戰爭抑制를 위해 필요한 政策이며 政府는 이러한 美國의 政策을 존중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核雨傘保護內容은 核先制攻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同盟國이 적대세력으로부터 核攻撃을 받을 경우 이를 核武器로 방어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으로써 그 자체가 抑制力이 되고 있습니다.

核雨傘保護는 戰術核武器가 아니라도 域外 核抑制力으로서 가능한 것이므로 이번 美國의 조치에 관계없이 우리의 安保態勢와 對北抑制力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韓·美間的 協의는 그동안 頂上會談 年例安保協議會 등을 통해서 긴밀히 協의해 왔으며 盧大統領께 보낸 親書에서도 부시 美國大統領은 美國의 對韓 安保公約이 확보부동하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고 駐韓美軍의 존재와 함께 美國의 安保公約 再確認은 우리의 對北抑止力維持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金德圭議員께서는 地上軍을 감축해서 精銳化함으로써 절약되는 재원을 戰力增強事業에 투입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國防部도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金議員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방향으로 政策轉換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國防部에서 연구하고 있는 21世紀를 지향하는 中·長期國防政策發展研究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政策方向의 전환은 安保環境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때 가능한 것이며 현재와 같이 北韓의 재발 도발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100萬의 常備兵力을 유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바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칫 北韓의 도발을 自初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兵力을 감축해서 그 절약되는 재원으로 軍을 精銳化한다는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裝備現代化에 따른 전문학적인 豫算所要와 人力의 專門化가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새를 들어서 地上軍 55萬名을 1年間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은 總 9,500億원입니다.

그러나 여러 議員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新銳 戰鬪機 F-16 戰鬪機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豫算이 3兆7,000億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人力의 專門化는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도 없으며 이를 위한 人力養成과 支援制의 導入 등은 이에 상응한 豫算所要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현시점에서는 適正兵力維持와 戰力의 現代化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國防豫算節減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豫算에 문제가 허용된다면 저희 韓國軍은 분명히 少數精銳化로 가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논리에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金德圭議員께서 軍縮과 관련한 政府의 구체적 계획과 그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軍備統制政策은 南·北韓간의 政治 軍事的 信賴構築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軍備 減縮을 구현함으로써 安保冒險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韓半島의 平和統一 與件造成에 기여하는 것을 政策基調로 삼고 있습니다.

政治的 信賴構築은 우선 南北關係를 正常化하기 위한 基本原則에 합의해서 南北 關係改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軍事的 信賴構築은 쌍방 軍事活動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켜서 기습공격 위협을 줄이고 우발적 사태로 인한 긴장의 고조를 예방하기 위해 共同危機管理制度를 마련하는데 主眼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단계적 軍備減縮은 이러한 政治·軍事的 信賴關係를 토대로 軍事力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격형 무기를 相互 同數保有토록 하며 武器減縮과 병행하여 해당 兵力을 減縮하고 豫備戰力의 규모와 動員訓練을 제한하는 등 보다 낮은 수준에서 軍事力 균형을 유지하고 기습공격능력을 제한하는데 1次的인 主眼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軍費統制政策이 政治·軍事的 信賴構築을 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그 이유는 1次世界大戰 이후 世界軍縮의 失敗原

因과 2次世界大戰 이후 東西 軍縮協商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상호 투명성을 提高하는 開放化와 民主化가 실질적인 軍縮協商에 관건이며 폐쇄적 全體主義 獨裁國家와의 실질적 軍縮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金顯煜議員께서 美國의 核政策變化를 계기로 駐韓美軍 撤收가 가속화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政府의 對策을 물으셨습니다.

駐韓美軍 撤收는 작년 6月 체리 美國防部長官에 의해 확정 발표된 美軍事力減縮計劃에 의거 來年末까지 7,000名이 감축될 예정이고 95年 이후 추진방향은 현재 韓·美 相互間에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駐韓美軍 撤收나 최근 발표된 부시 美國大統領의 新核政策宣言은 공히 美國의 汎世界的 安保政策의 일환임에는 틀림없으나 美國의 재래식 軍事戰略과 核政策이 반드시 동일 궤도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新核政策宣言이 既 추진중에 있는 駐韓美軍撤收計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國防部에서는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美國의 政策變化와 관련해서 美行政府와 긴밀한 협의하에 韓半島安保에 차질이 없도록 그 對策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玉滿鎭議員님의 質問에 대한 答辯입니다.

玉滿鎭議員님께서서는 安保環境의 변화 특히 北韓의 변화에 대해서 統一院 外務部 國防部가 三位一體가 되어서 그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과 中·長期國防政策과 戰略發展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이 問題와 관련해서 崔在旭議員께서도 유사한 내용을 質問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國防部에서는 北韓의 변화를 비롯한 安保環境變化에 대하여 統一院 外務部 등 關聯部處와 정례적인 長官會議 내지 局長級 實務調整委員會를 통해서 수시 평가 및 필요한 對策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1世紀委員會 安保問題研究所 國防研究院 등 研究機關과 學界를 포함하여 광범위

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韓半島를 둘러싼 安保環境은 國際的 冷戰 終結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은 南北對決構造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90年代 후반기에 들어가야 해빙 구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北亞의 경우 國家間 共同安保 기반을 갖춘 유럽과는 달라서 주변 4強의 이해가 서로 상충됨으로써 新秩序 구축을 위한 세력 재편성 과정에서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北韓 또한 최근 UN加入 및 核安全協定 체결 의사 표명 등 다소 외형적인 宥和政策 표방에도 불구하고 本質的으로는 그들의 體制 유지를 위해서 폐쇄정책과 對南 赤化戰略을 고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0年代중반 이후에는 汎世界的 和解協力 指向 추세도 주변 4強 교차승인의 가능성이 높고 北韓의 경우 金日成 死後 金正日 카리스마의 한계성과 南北國力의 현격한 격차 軍事力 우위의 상실 또한 經濟難의 심화 등이 겹쳐서 體制變化 및 開放改革에 의한 實用主義 노선으로서의 전환과 이에 따른 對南赤化戰略의 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軍은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北韓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억제 및 대비 태세 확립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中·長期的으로는 安保環境의 平和共存 및 統一指向構造로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軍事戰略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軍事力 건설과 整備計劃을 발전시키며 단계적 軍備統制政策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 國防政策과 戰略發展을 도모하는 이중적 國防政策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래지향적 國防政策發展은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對北 일변도의 政策에서 탈피하여 주변 4強에 대한 對 주변국 安保政策을 망라하는 長期 안목의 거시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만 어떤 경우이든 自由國防力の 조기 확보가 절대명제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玉議員님께서 下士官의 처우개선

및 福祉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먼저 軍의 處遇와 福祉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재 將兵들의 사기 福祉問題는 심각한 실정으로 下士官들의 轉役 희망율이 증가하고 우수인력의 軍志願率이 低下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民間福祉部門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한데 기인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國防豫算 확보의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國防部에서는 제한된 豫算 범위내에서 下士官들의 主要福祉의 요소인 處遇 住居 子女들의 教育問題 또 下士官들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下士官處遇는 國家財政과 他 公務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政府方針을 준용하되 특히 下士官들에 대해서는 軍服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軍人 장려수당 인상과 각종 기술수당 및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인상하여 報酬水準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下士官 확보를 위해서 制度의 改善과 子女教育支援을 위한 장학금의 확대 및 기숙사의 건립을 비롯해서 住居安定을 위한 관사도 97年度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下士官들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서 각종 근무여건과 규정의 개선과 함께 특히 下士官 자신들에게도 國家防衛에 대한 고귀한 사명감을 일깨워 주어서 軍服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教育을 強化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계획들도 國防費의 적정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議員들에게 다시한번 호소를 합니다.

다음은 盧武鉉議員님 質問에 대한 答辯입니다.

盧議員님께서 核 主權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質問을 하셨습니다.

美國이 韓半島와 관련해서 核 사용이 고려되는 가상적 상황을 거론한 것은 1975年 越南 敗亡이후 포드 美國大統領이 韓國이 침략을 받을 경우 대응수단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發言을 한 바가 있고 당시 謝辭된 陸國防長官은 核 사용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마 있으나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核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發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美國의 核武器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NATO地域과 여타 全世界에 대하여 NCND政策을 적용하고 있는 美國의 입장을 존중해서 과연 어디에 얼마만한 核武器가 배치되어 있는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事項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TO國家들이 美國의 核 전략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多數國家로 구성된 특수성 때문에 긴밀한 相互協議가 필요함으로써 核企劃團을 구성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西獨배치 核武器가 東獨을 목표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核을 수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NATO戰略과 戰術核武器의 특성과 그 위력상 대량 집중되는 가상 적을 타개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韓半島와 관련한 核政策에 대해서는 韓·美間에 韓·美頂上會談 年例安保協議會議 長官單獨會議 등을 통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금번 美國의 核政策과 관련해서도 지난 7月 韓·美頂上會談과 8月 하와이에서 韓·美高位安保政策協議會에서 긴밀히 협의되었으며 금번 美國 大統領의 발표에 앞서 부시 大統領은 멕시코를 訪問中인 盧大統領께 친서를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美國의 新 核政策宣言과 관계없이 韓·美兩國은 앞으로도 NCND政策을 계속 유지할 것이나 부시 美國大統領이 宣言한 바대로 美國은 全 世界的으로 戰術核武器의 철수를 추진할 것이므로 이러한 政策이 駐韓美軍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韓·美間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행될 것입니다.

한편 부시 美國大統領 宣言時 유럽에 있어서 空中運搬核能力은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나 기타 지역은 불확실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 美國과 關聯國家間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北韓에 대한 核攻撃과 관련한 美 軍事關係者들의 發言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

며 美國의 核政策基調는 美國이나 그 同盟이 假想敵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先制攻撃을 하지 않는다는 核先制 不使用政策을 채택하고 있고 이를 수차례에 걸쳐 천명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사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北韓의 核査察拒否에 대한 美國 蘇聯等 核保有強國들의 軍事的 制裁措置를 포함한 強壓的 沮止對策과 관련한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北韓의 核開發 施設除去 및 沮止에 한정된 문제이지 결코 北韓에 대한 武力先制攻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적인 어떤 조치보다도 核開發拋棄를 유도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서 레이건 前 美國大統領의 對蘇強壓政策이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 蘇聯 大統領의 改革 및 開放政策을 유도하는데 크게 주효했던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北韓이 그 한계를 인식하고 核開發拋棄는 물론 對南武力赤化統一路線을 변경토록 유도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盧議員께서는 韓半島非核地帶化와 관련한 大統領 언급내용이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인지와 同盟國의 입장 및 美國과의 사전 협의여부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核問題를 포함한 安保問題에 대해서 政府도 내부적인 검토는 물론 同盟國인 美國과도 항상 긴밀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盧大統領께서 말씀하신 東北亞周邊 關係國의 核除去 추구는 核을 보유한 城內 모든 國家가 緊張緩和와 信賴構築에 노력하여 核이 필요 없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시 大統領의 戰術核武器廢棄宣言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올바른 진전인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蘇聯도 이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中國도 이를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盧大統領께서는 北韓에 대해서는 核武器開發의 포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尹衡 民主黨의 盧武鉉議員의 補充質問 申請이 들어와 있습니다.

盧武鉉議員 나오셔서 補充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議員 귀함께는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해달라는 취지로 번호를 또박또박 이렇게 붙여서 質問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質問한 취지를 사전에 넘겨 짚어서 그 취지를 다른 견해로無力化시키는 방향으로만 긴 설명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실에 관한 質問에 대해서는 答辯이 부족했던 것이 一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상 앞에서부터 물어야겠습니까만 뒤의 것부터 먼저 물어본다면 조금 전에 國防部長官께서 答辯하셨는데 부시宣言 이전에 事前協議가 있었다.

그리고 東北亞非核地帶化의 提案에 관해서 미리 美國과도 긴밀히 事前協議가 되었고 또한 世界的으로 核을 없애자는 취지로 한 것이다 이렇게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충분히 준비되고 검토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물었던 것은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非核地帶化를 위한 蘇聯과 中國의 구체적 提案이 과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부시大統領이 戰術核撤收宣言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고르바초프가 蘇聯에서 또 戰術核을 어떻게 하겠다 全面的으로 폐기하겠다 이런 주고 받는 푸와무드의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東北亞非核地帶化에 관한 구체적 提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美國이 부시宣言 속에서는 駐韓戰術空軍核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얘기로 되고 있는데 이런 판에 韓半島非核地帶化를 美國과 긴밀히 협의하고 國內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발표한 大統領이 韓半島非核地帶化를 얘기하자면 友邦間에 무슨 손발이 맞는다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손발맞춰서 한다고 答辯하셨는데 어떻게 손발맞춰서 한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美國大統領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韓國大統領이 하는 얘기가 달라서야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質問한 것인데 答을 다 피해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答辯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東北아시아의 非核地帶化에 대해서 美國이 同意할 것인가? 答辯해 주십시오.

그 다음 統一院長官께 아까 물었던 것중에서 高麗聯邦制와 金日成 1黨體制受容 운 主體思想 인정하는 이런 것은 報道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報道와 大統領의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달랐는지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서로 받아 들이고 또 조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상대와 협의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할 때는 항상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大統領이 이와 같은 평소의 신념과 구상을 밝히셨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政府部處間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구상을 구체적으로 現實化하기 위해서 지금 統一院에서 이제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밝혀 주십시오.

만일에 이와 같은 大統領의 發言이 있고 그것이 평소 大統領의 權限에 따른 신념과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統一院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大統領 따로, 統一院 따로, 政府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大統領 보좌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에 관해서 충분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제 2-3과 2-4 2-5 2-6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저는 2-3에 관해서는 이와같은 報道가 사실이냐? 大統領政策補佐官 또는 統一政策室 또는 靑瓦臺秘書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잡지에 報道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여부에 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적어도 國文法을 알고 보통의 감각으로 國語를 이해하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 이것은 吸收統一方案이라고 느끼게 되어 있는데 9月25日字월스트리트 저널紙와의 회견에서 大統領께서 吸收統一할 생각은 없다. 심지어 西獨과 東獨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고 이것이 왜 다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答辯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吸收는 무슨 吸收하자는 것이 아니라 合流되면 그만이라는 答辯을 그냥 하셨는데 吸收는 무엇이며 合流는 무엇인지?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물어놓고도 미안합니다. 제가 答辯을 할래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吸收나 合流나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말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써놓았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答辯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國務總理께 물었던 答辯을 外務部長官이 答辯하실 때 平和協定の 當事者에 관해서 물었더니 外務部長官께서는 休戰協定の 署名者와 當事者는 다르고 또 三者協定은 對南赤化戰略이라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UN司는 이제 남이고 平和協定の 當事者는 南韓當局이다... 저는 그 現實性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前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만 署名者와 當事者가 다르다라고 하는 論理만을 관철하게 될 때 그러면 155回 臨時國會에서 어느 長官이 UN司가 休戰協定の 署名者이기 때문에 UN司令部の 解體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答辯하신 일이 있고 現實的으로 UN司令官이라는 이름을 가진 美國의 將星이 韓國의 作戰指揮權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覺書한 장으로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署名者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 南韓이 交戰當事者임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同意합니다.

그러나 署名者는 소용없다... 이것 참 옛날에 누가 覺書같은 것은 써놓고도 그냥 뒤집어 버리니까 그것 내 놓은 사람이 오

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리는 예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作戰指揮權을 넘겨 주었던 覺書 한 장도 휴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統一對備策에 관해서 이르는 方案이나 이후의 對備策이나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는데 이 점은 答辯이 명백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西獨政府에 保安法과 같은 法이 있느냐 하는 문제 1-2와 1-3에서 저는 東獨과 北韓의 비교를 答辯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具體的으로 處罰받은 사람이 있느냐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基本法 18條가 나오니까? 이것은 나치스가 復活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法이지 反共法이 아닙니다.

그 비교를 물은 것이 아니고 數字를 答辯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 TV 放送의 開放에 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答辯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開放을 했을 때 어떤 副作用과 國內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宣言과 7·20民族大交流宣言 그리고 앵구버宣言 이것을 사전에 統一院이 立案했느냐고 물었는데 대해서 原則만 말씀하셨고 具體的으로 그렇게 했다 안했다는 答辯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게울리 들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具體的으로 한 번 더 答辯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에 가서 統一政策을 立案 執行함에 있어서 輿論收斂機構는 무엇 무엇이 있으며 이 機構들이 과거에 具體的으로 어떤 實績을 남겼느냐를 具體的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것 이외에 어떤 機構가 있다는 答辯도 없었고 어떤 諮問이나 意見을 제공했다는 점에 관해서 저는 答辯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核主權에 관해서 2-1에 관해서 美國의 核武器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韓國에 배치된 것을 NCND政策을 존중해서 答을

못한다 할지라도 外國에 있는 그 나라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場內騷亂)

○副議長 趙尹衡 盧議員! 좀 참으시라고... 統一院長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統一院長官 崔浩中 統一院長官입니다.

盧武鉉議員님께서 주신 補充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答辯을 할 때에 말씀을 올렸습니 다마는 盧武鉉議員님께서 統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質問을 일시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섯가지 범주로 이것을 묶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섯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答辯을 드리면서 또 밑에 번호가 붙어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答辯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質問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答辯을 준비하는 時間的인 여유도 충분치 못했던 관계로 지금 補充質問을 하시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바를 補充質問에 따라서 答辯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大統領께서 記者懇談會에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보도가 다르다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보도에는 처음에 마치 大統領께서 高麗聯邦制도 수용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統一方案에 수정을 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大統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후에 하와이에서 명백히 하신 것처럼 우리가 南北間에 진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결코 高麗聯邦制를 수용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吸收統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大統領秘書室에 있는 분이든가 外交安保研究院이든가 統一院 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吸收統一이라는 말도 있고 舍流統一이라는 말도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 정착이나 또 그런 말을 정확하게 한 것이 있느냐.....

제가 짧은 기간에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靑瓦臺政策補佐官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관해서는 盧武鉉議員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정확한 것을 時間을 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獨逸의 통일을 놓고 볼 때에 西獨이 東獨을 吸收統一하려고 원하지는 않았습니 다라는 結果的으로 볼 때 吸收統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東獨이 자기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西獨으로 합류를 원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어서 結果적으로 吸收統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처럼 결코 北韓을 吸收統一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政府로서도 吸收統一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新聞用語라든가 여러 가지 바깥에서 생겨난 말이고 政府로서는 吸收統一이라는 말을 한 바도 없고 또 吸收統一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은 7千萬 우리 南·北韓에 사는 同胞 海外에 사는 同胞가 다같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런 統一을 하기 위해서 北韓도 자기네 체제를 고집하지 말고 세계의 조류를 인식 을 해서 차츰 改革과 開放으로 政策變化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北韓도 좀 더 잘 살게 되면 그러한 바탕위에서 南北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 이러한 민주적인 자주적인 平和統一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基本方針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獨逸에 우리의 國家保安法과 유사한 法律이 있느냐 하는 質問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東獨과 西獨의 관

제 또 저희들이 南·北韓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는 한가지 法例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國家保安法과 똑같은 그러한 법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고 國家를 유지해 나가고 反國家的인 행위는 이것을 처벌해야 하는 그러한 法體制는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駐獨大使로 하여금 구체적인 處罰… 數字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시켜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TV開放問題에 대해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은 좋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開放을 못하는 것이냐 하는 質問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北韓이 지금 二重的인 戰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기네 體制를 유지하기 위해서 2制度 2政府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南쪽을 내려다 볼 때 조금 소요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동을 해서 교란을 하면 赤化 顛覆統一戰略을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한 또 二重的인 面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後者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텔레비전이나 이러한 言論媒體 이런 것을 전부 開放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宣傳政策으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南北對話라든가 高位級會談을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비방을 하지 않고 內政에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基本合意를 하고 그 바탕위에서 텔레비전이나 기타 言論媒體를 전부 開放하자 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번 南北高位級會談에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거듭 저희들이 通信 通行 通商의 3通協定을 체결하는 바탕위에서 이러한 텔레비전과 기타 言論媒體의 開放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20民族大交流라든가 7·7宣

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成案이 되고 어떻게 發表가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統一院이 모든 政策을 도맡아서 그것을 成案을 하고 이것을 建議드리는 것이 아니고 民間도 좋고 政府 各 部處도 좋고 다 建設的이고 바람직한 方案이 있으면 이것을 내놓으면 저희들 統一院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協議 檢討해서 그 결과를 大統領께도 建議를 드려서 政策으로 채택하는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輿論收斂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輿論民意를 代表하는 것은 國會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國民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고 國民을 代表하는 民意의 陣營에서 이러한 우리 國民의 輿論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外務統一委員會는 물론이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마련된 統一特別委員會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輿論收斂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統一院에는 各界各層의 專門家를 망라한 諮問委員會를 가지고 있고 또 各界의 元老이 元老 가운데는 各 黨에서 추천하신 元老들을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統一顧問會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民間團體로서 여러 가지 統一問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團體도 많고 또 言論界에서도 北韓部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두어서 統一問題에 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輿論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저희들이 輿論을 收斂해서 統一政策을 추진해 가는 이러한 자세를 앞으로도 더욱 굳게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補充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렸습니다.

○副議長 趙尹衡 다음에 外務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務部長官 李相五 外務部長官입니다.

아까 盧議員님께서 補充質問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休戰協定에 비록 우리가 韓國이 署名하지

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休戰協定은 軍司令官들간의 休戰協定입니다. 잠정적인 戰爭終結에 관한 協定입니다.

그러나 休戰協定の 실질적인 當事者가 韓國이라는 데 아무런 異論이 없습니다. 現實적으로 法的으로 그것은 自명한 것입니다.

또한 休戰協定을 代替하는 항구적인 平和體制 그것이 이름이 平和協定이었던 무엇이든간에 그것은 앞으로 協商過程에서 결정될 것입니다라는 저기의 실질적인 直接當事者가 南·北韓이라는 데 대해서도 그것은 自명한 일입니다. 北韓이 韓國이 休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休戰協定을 代替하는 平和協定締結을 美國과 北韓間에 해야 된다는 그 論理는 이치에 닿지도 않고 그것은 法的으로나 現實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또 國際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論理입니다.

休戰協定の 실질적인 當事者가 南·北韓이고 직접적인 當事者가 南·北韓이고 休戰協定을 대체하는 항구적인 平和體制도 실질적인 직접 當事者인 南·北韓間的 協商과 合意를 통해서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副議長 趙尹衡 國防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李鍾九 國防部長官 補充質問에 대한 答辯드리겠습니다.

盧武鉉議員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質問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하나 거기서 충실하게 答辯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제가 答辯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한번 檢討해 보시고 어느 부분이 미진하고 빠진 점이 있다면 직접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補充質問 하신 것 가운데서 東北亞地域의 非核地帶化問題에 대해서 美國과 同意했느냐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質問을 하셨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答辯을 드리기 전에 우리 大統領께서 韓半島 非核地帶化를 말씀하신 바는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南北間的 즉 北韓이 核開發을 포기하고 南北間的 緊張緩和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韓半島에 非核化問題를 털어 놓고 상의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非核地帶化란 말과 非核化라는 말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韓半島의 非核地帶化問題는 美國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東北亞地域의 非核地帶化問題는 美國과 韓國만의 문제도 아니고 韓國과 北韓만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韓半島 非核地帶化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東北亞地帶에 대한 非核地帶化問題에 대해서 언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東北亞地域 非核地帶化問題에 대해서는 美國에서 어떠한 提議도 提案도 저희들에게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서 韓半島 非核地帶化는 전연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전제에서 東北亞地帶의 非核地帶化는 논의할 時機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答辯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趙尹衡 그러면 이것으로써 統一·外交·安保에 관한 質問을 終結할 것을 宣布합니다.

내일 第8次 會議는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41分 散會)

○出席議員數 266人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國務總理	鄭元植
副總理兼統一院長官	崔浩中
外務部長官	李相玉
內務部長官	李相淵
國防部長官	李鍾九

【報告事項】

○議案提出

綜合有線放送法案

(10月9日 政府提出)

文化公報委員會에 回附하겠음

情報通信研究開發에 관한 法律案

(10月10日 政府提出)

交通通信委員會에 回附하겠음  
即法審判에 관한 節次法中改正法律案  
(10月10日 政府提出)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하겠음  
軍人保險法中改正法律案

國家有功者 團體設立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이상 2件 10月10日 政府提出)

이상 2件 保健社會委員會에 回附하겠음